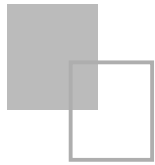


**대토론회**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과제**

**| 주최 |** 헤럴드경제, 대한상공회의소, 현대경제연구원  
**| 일시 |** 2010. 12. 7(火) 14:00~17:3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의원회의실

## ■ 대토론회 일정

13:30 ~ 14:00	등록
14:00 ~ 14:20	개회사 및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개회사 김 주 현 (현대경제연구원장)</li><li>■ 축 사 박 행 환 (헤럴드미디어 사장)</li></ul>
14:20 ~ 14:40	기조발제: 한국의 미래 비전과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li></ul>
14:40 ~ 15:10	주제 발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방안</li><li>-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li></ul>
	주제 발표 2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li><li>- 송병준 (산업연구원장)</li></ul>
15:10 ~ 15:20	휴식
15:20 ~ 16:10	분야별 과제 발표 및 토론 (제1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좌 장 :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li></ul> 분야별 과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li><li>■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li><li>■ 최영기 (前노동연구원장,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li><li>■ 최영탁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부 교수, 前STEPI원장)</li></ul>
16:10 ~ 17:30	종합 토론 및 마무리 (제2라운드)



개 회 사





##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10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슬기로운 대처와 신속한 경기회복은 한국경제의 저력을 세계 각국에 널리 알린 큰 성과였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 회의도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이제는 위기 이후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다가오는 2011년은 한국경제가 지속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정체하느냐 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지속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느냐, 아니면 2만 달러의 늪에 빠져 '잃어버린 10년'처럼 허송세월 할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성장잠재력의 확충에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4%대 중반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인 투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인적 자본과 요소 생산성을 제고하는 등 한국경제의 질적인 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스템을 혁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부터 매달 한 차례씩 學界, 研究界, 官界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위기 이후 지속성장 과제'를 모색하는 분야별 세미나를 개최해 왔습니다.

오늘 공개세미나는 지난 6개월간 심도 있게 논의한 '지속성장 과제'를 종합적으로 토의함으로써 보다 깊이 있고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자로 모신 분들은 그야말로 이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매우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할애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6개월 동안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지속성장 전략을 함께 고민했고 오늘 이 같이 뜻 깊은 행사를 함께 주관해주신 헤럴드미디어 박행환 사장님께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2020년을 향해 발진하는 ‘한국경제’호의 지속성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사적인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 대토론회 :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 과제



- 기초발제 : 곽 승 준 (미래기획위원장)
- 주제발표 : 좌 승 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송 병 준 (산업연구원장)
- 좌 장 : 이 승 훈 (서울대 명예교수)
- 분 야 별
- 과제발표 : 김 용 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태 준 (한국금융연구원장)  
최 영 기 (前노동연구원장,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 영 락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부 교수)





---

---

■ 기초발제(요약) : 한국의 미래비전과 성장잠재력 확충방안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을 세계경제 변화, 인구 변화, 기술 변화, 기후 변화, 국내외 정치 변화 등 5개 변수로 보고, 이를 기회, 위협, 장점, 단점으로 분석
- 우리나라의 비전은 개방과 혁신, 통합을 통해 인재와 지식이 모이는 더 큰 대한민국을 이루는 것이며, 성장과 통합, 세계화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은 개방, 혁신, 통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인 통일 안보를 추가
- 2040년에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로 G10, 1인당 국민소득 6만불에 이를 것으로 예측

## ■ 주제 발표 1 : 지속성장을 위한 경제시스템 선진화 방안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 I. 경제발전의 차이는 어디서 오나?(1)

#### ◆ 미국경제와 한국경제의 차이

##### ● 미국경제

- 세계 전체인구의 4.6%가 세계부의 20.5%를 창출

##### ● 한국경제

- 0.7%의 인구로 1.1%의 부를 창출

→ 미국의 경제시스템, 혹은 경제사회제도적 환경은 한국에 비해 모든 경제주체가 4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 제공: 미국사회의 경제주체간 상호작용의 게임은 한국에 비해 4배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음

→ 한국은 향후 각 주체가 현재보다 4배의 역량을 키우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을 창출해 내야 선진일류국가 도약 가능

→ 어떤 시스템적 차이가 이런 차이를 만들어 내나?

### I. 경제발전의 차이는 어디서 오나?(2)

#### ◆ 복잡계 경제의 Non-linear interaction이 발전의 원천이다.

- 시너지의 공유를 통한 창발현상이 발전과정이다. → 열린, 그래서 남과 소통하여 시너지를 향유하는 사회만이 창발, 발전할 수 있다.

- 열역학 제2법칙 "닫힌 시스템은 엔트로피의 극대화로 소멸할 수 밖에 없다"

#### ◆ 칼 마르크스의 계급 투쟁론과 자본주의 모순관/주류 경제학의 완전경쟁모형은 시너지 창출의 상호작용이 없는, 그래서 발전이 없는 세계를 그리고 있다.

- ◆ "시너지"의 극대화를 가져오도록 사회내의 상호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경기규칙만이 발전을 가져온다.

## I. 경제발전의 차이는 어디서 오나?(3)

- ◆ 흥하는 이웃을 따라 배우는 사회는 흥하지만 흥하는 이웃을 폄하하는 사회는 흥할 수 없다.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내가 흥할 수 있다.
- 흥하는 이웃을 키워내는 사회만이 발전할 수 있다. → 흥하는 이웃을 키워내는 경제시스템이 발전친화적이다.
- ◆ 경제시스템은 경제제도 혹은 경기규칙에 의해 정의된다. 시장 또한 그러하다.
- 참고; 좌승희, "진화를 넘어 차별화로", "대한민국 성공경제학"

## II. 자본주의의 신 발전원리 요약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1)

< 발전경제학의 신 원리 >

- 1)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
  - 모든 복잡한 시스템의 한 차원 높은 질서로의 창발현상은 구성인자간의 시너지 공유를 통해서 가능
  - 창발: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고차원의 질서를 창출하는 현상
  - 경제발전: 마차→기차→자동차→비행기→우주선 경제로의 창발 현상
  - 생명현상은 이웃간의 시너지공유를 통해 가능 : 세포덩어리→생명현상
- 2) 발전은 흥하는 이웃을 따라 배움이다.
  - 발전은 흥하는 문화유전자의 전파과정이다.
  - 발전은 부모, 형제, 배우자, 이웃, 스승, 선배, 후배로부터 인생의 노하우를 배움이다.

## II. 자본주의 신 발전원리 요약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2)

- 3). 시장은 흥하는 경제주체를 선택하고 지원하는 “경제적 차별화” 장치이다.
- “경제적 차별화”란 경제적 성과에 따라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장은 항상 경제적 차등과 차이, 차별을 만들어낸다.
  - 시장은 스스로 돕는 자만을 도움으로써 모두를 스스로 돕는 흥하는 자로 유도해내는 동기부여장치이다.
- 4). 경제발전의 과정은 흥하는 이웃의 성공노하우를 무단복제(無斷複製)하여 따라 배워 모두가 흥하는 자로 변신하는 문화진화과정이며, 시장은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바로 이 과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 그래서 흥하는 이웃이 없이 내가 흥(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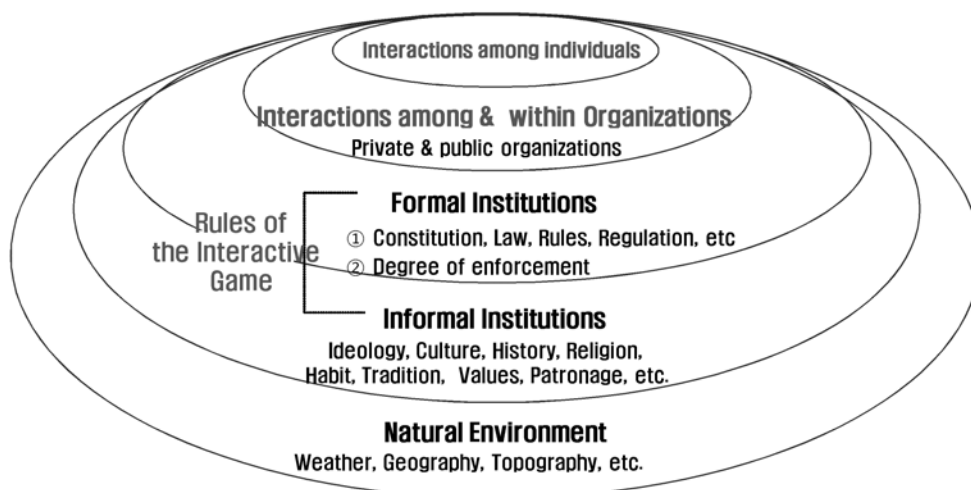
## II. 자본주의 신 발전원리 요약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3)

- 5). 정부는 시장기능에 역행하여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기능을 강화시킬 수는 있다.
- 경제발전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흥하는 이웃(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적 차별화” 전략을 통해야 가능하다.
  - 발전은 흥하는 이웃이 양산되는 과정이며, 시장과 더불어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할 때라야 발전이 가능해진다.
- 6)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동반성장을 가져오지만, 모두 같아 지지는 않는 과정이다.
- 경제발전은 경제적 차등, 경제력 집중을 수반한다.
- 7). “경제적 차별화”에 역행하여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면 경제의 역동성은 훼손된다.

## II. 자본주의의 신 발전원리 요약 : 흥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흥한다(4)

- 8). 정치경제체제가 부의 평등과 지역발전의 균형 등 “경제적 차별화”에 역행하는 전략을 추구하면 경제의 정체는 피할 길이 없다. 과도한 복지의 함정은 여기서 비롯된다.
- 9). 복지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과에 기반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10).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항상 충돌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평등한 사회와 시장경제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차이, 차등, 차별은 양립하기가 어렵다. 민주정치가 경제적 다름을 수용하지 못하면 시장경제의 정체는 불가피해진다.

## III.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성과 제도의 역할(1)



### III.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성과 제도의 역할(2)

- ◆ 제도경제학과 진화적 관점에서 본 경제사회의 구성:우리 모두는 부처님,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환경=제도=하나님, 우리모두는 환경의 산물)
- ◆ 시장 (혹은 경제시스템)은 경기규칙, 즉 경제제도의 집합이다. 경기규칙이 없는 시장은 진공이다.
  - Soccer 축구와 American Football 미식축구의 차이?
  -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다르다.
  - 미국 기업과 한국기업은 다르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시장 행태는 다르다.
  - 그래서 시장은 국적이 있다. 시장이 다르면 경제성과도 다르다.
  - 글로벌 스탠더드는 잘 못 쓰면 독이 된다.

### III.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성과 제도의 역할(3)

- ◆ 이념에서 자유로운 시장경제는 없다→이념이 다르면 시장규칙도 다르고 경제성과도 다르다.
  - 미국의 민주당의 원하는 시장과 공화당이 원하는 시장은 다르다.
  - 한국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원하는 시장은 다르다.
  - 남한과 북한의 시장은 다르다. 한국인과 북한 인민은 다른 경제인이다.
  - MBnomics와 Djnomics, Nmnomics 는 다르다.
  - Bishop 여사가 19세기 말에 관찰한 북간도의 한국인과 조선의 한국인은 같은 조선인이 아니다.

### III.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성과 제도의 역할(4)

- ◆ 종교가 다르면 시장도 다르다
  - 이슬람문화에서의 시장규칙과 동양문화에서의 시장규칙은 다르다. 기독교 문화도 다르다. 그래서 경제성과도 다 다르다.
- ◆ 이념과 문화, 종교적 전통을 받은 헌법의 내용과 여기서 나오는 실정법규의 내용이 다르면 사람의 행동, 기업의 행동, 전체 경제성과도 달라진다.

→ 경제시스템의 개혁은 시장경기규칙을 바꿔 개인과 기업의 행태를 바꾸고자 하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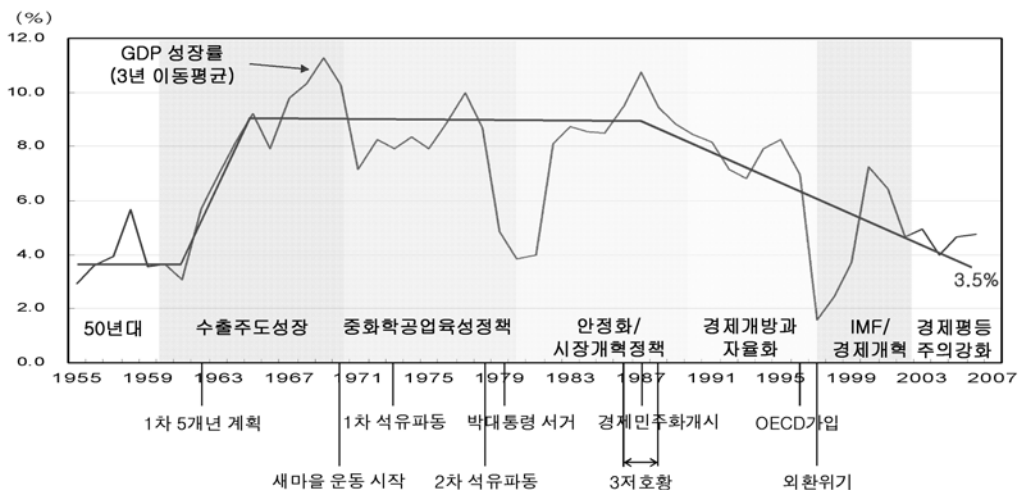
### III.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성과 제도의 역할(5)

- ◆ 제도가 세상을 바꾼다.
  - 9억 이상의 주택에 부유세를 30년 넘게 부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 아파트 분양가를 계속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
  -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특별 규제를 오래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 특정 규모 이하의 기업에만 특혜를 계속 부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 가난한 농민에만 혜택을 부여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 교육격차를 없앤다는 평준화 교육을 계속하면 무슨 결과가 생길까?
  - 균형발전정책을 계속하면 무슨 결과가 생길까?
  - 국가나 정부,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포퓰리즘의 결과는?)

### III. 경제사회시스템의 구성과 제도의 역할(6)

- ◆ 선진화란 경제사회제도를 바꿔 국민들(개인, 기업, 정치인, 정당, 공무원, 대학교수, 교사, 농민, 중소기업자, 대기업 등등)의 행동과 더 나아가 생각을 발전친화적으로 바꾸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 ◆ 어떠한 제도로 바꾸어야 하나? 선진국을 베낀다? : 성공하는 선진국도 많지 않다. 정체 속의 선진국이 더 많다.
- ◆ 발전친화적 제도가 중요하다 : 시장규칙, 즉 경제사회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나라는 경제발전을 이루고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다.

### IV. 지난 60년,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1)



주: 차우 검정(Chow test)을 통해 1961, 65년, 87년이 추세전환점(break year)임을 확인. 1955-61년간 추세선의 기울기 = 0.00(0.03), 1961-65년간 추세선의 기울기 = 1.47(8.35), 1965-87년간 추세선의 기울기 = -0.06(-1.03), 1987-2006년간 추세선의 기울기 = -0.30(-4.56). ( )내는 t-값



#### IV. 지난 60년,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 (2)

- ◆ 개발연대에는 성공하는 자를 우대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즉 국민성공시대 실현:기업과 지역에의 경제력 집중과 집적이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 1960년대 이후 30년 가까운 기간에 이룬 연평균 8% 이상의 초고속 성장은 세계 경제발전 사에 지울 수 없는 금자탑.
- 이는 스스로 돕는 자를 더 우대하는 차등과 차별화를 통해 혁신가들을 양산하고,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키워내고, 게으른 마을을 부지런한 마을로 바꿔내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바꿔내고, 실패하던 사람들을 성공의 대열에 참여 시키는 과정이었음.
- 소위 부와 경제력의 집중과 부문간, 지역간 불균형을 만들어 내는 과정.

#### IV. 지난 60년,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 (3)

- 정책사례
  - 수출 우수 업체만 지원한 수출진흥정책
  - 성과 우수 새마을만 지원한 새마을운동
  - 수출에 성공한 기업에게만 진입을 허용한 중화학 육성정책
  - 수출우수 중소기업만 지원한 중기육성정책
- 성공하는 국민을 우대함으로써 국민성공시대 실현
-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앞서가는 국민을 우대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하면 된다는 이념과 정신의 소유자로 전환

#### IV. 지난 60년,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 (4)

- ◆ 민주화 이후, 성공하는 국민을 상대적으로 폄하하는, 경제력 집중과 집적의 해체노력이 외환위기와 오늘날의 경제어려움을 가져왔다.
- 지난 20여 년의 경제성장의 둔화와 경쟁력의 저하는 성공하는 국민들을 폄하하는 경제사회제도 속에 국민들의 경제적 유인이 약화된 데 기인한다.
- 80년대 중반과 후반 이후 한국경제 개혁의 화두는 무엇이었는가?
  - 바로 개발시대 성공의 밑바탕이었던 경제력의 집중과 불균형을 청산하는 일.
  - 경제력의 분산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이루고 균형발전을 통해 계층간, 부문간, 지역간 균형을 이루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정책 목표였음.
- 집중과 집적의 해체/경제민주화와 균형발전은 민주화세력과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의 합작품?

#### IV. 지난 60년,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 (5)

- 정책사례: 성공하는 국민을 폄하하는 평등주의 함정
  -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더 지원 받는 중기육성정책
  - 성공했기 때문에 특별히 규제 받는 대기업 규제정책
  - 가난하기 때문에 더 대접 받는 농업 지원정책
  - 근로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노조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키워온 경영 민주화 정책
  - 수도권이기 때문에 규제 받고 지방이기 때문에 차별 없이 지원 받는 균형발전정책,
  - 서울에 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방대학에 비해 역차별 받는 제도,
  - 우수한 학생을 역차별 하는 교육평준화제도.

## IV. 지난 60년, 한국 경제발전의 경험 (6)

- 혁신하고 흥하는 자를 역차별 하는 경제 사회 모든 부문의 정책들은 그럴듯한 정치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빼앗아 감으로써 경제사회의 정체를 가져옴.
- 참여정부는 성공하는 국민을 폄하하는 일에 더욱 몰두
  - 강남청산, 부자청산, 서울대 폐지라는 레토릭은 물론 실제로 행복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배분 등 지방 우대정책과 수도권규제의 강화, 부유세의 도입 등, 그 동안의 정책에서 더 나아가 흥하는 자를 역차별하는 발전 역행적인 정책들을 더 양산.

## V. 제도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1)

- ◆ 제도의 내용을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 공식적, 비공식적(이념, 문화, 가치관, 관행) 제도가 발전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 어떠한 제도가 발전친화적인가?
- 투쟁과 경쟁 vs. 호혜적 상호작용?
- “자조하여 흥하는 이웃을 우대”하는 제도가 발전친화적
- 국가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 V. 제도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2)

<제도개혁의 틀>

1. 비공식적 제도의 개혁
  - 국민의 이념
  - 가치관
  - 문화
2. 공식적 제도의 개혁
  - 헌법
  - 법률
  - 규제
3. 공정한 법, 제도와 공정한 집행 → 사회적 신뢰

## VI. 발전(성공)친화적인 제도개혁의 방향

- ◆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발전역행적인 이념과 공식적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고 취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이익이 가도록 하지 않고, 어디에 있던 항상 스스로 돕는 국민이 더 대접을 받도록 경제 사회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 VI-1. 국민의 이념을 바꿔야 한다(1)

### 1) 모든 국민들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 실패의 원인을 사회, 정부에 돌리는 국민들을 자조하고, 실패를 자기책임으로 생각하는, “하면 된다”는 자조정신이 충만한 국민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 중소기업, 농민, 근로자, 지방, 지방대학, 낙후지역 혹은 약자라야 대접 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 어떻게 하나? 개발연대의 “신상필벌”에 기초한 차별화 리더십이 참고가 될 수 있다. 정부도 정치권도 리더십도 성공하는 국민을 제대로 대접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 VI-1. 국민의 이념을 바꿔야 한다(2)

### 2) 경제력집중을 두려워하고 불균형을 두려워하면 발전을 만들어 낼 수 없다.

- 발전은 모두 나아지지만 결코 같아지지 않는 과정이다.
- 부자를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대기업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기게 하고, 서울대학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류대학이 더 많이 생기게 하고, 강남을 청산할 것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에도 강남이 여럿 생기게 하는 것이 발전을 일으키는 길
- 흥하는 자를 제대로 대접하는 길만이 흥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VI-1. 국민의 이념을 바꿔야 한다(3)

#### 3) 성장하는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 국제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양산되는 과정이 경제발전의 과정이다.
-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 각종 경제제도를 고쳐나가야 한다.
- 중소기업 육성제도도 성장하는 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고쳐야 한다.

### VI-1. 국민의 이념을 바꿔야 한다(4)

#### 4) 일류를 일류로 대접해야 한다. 이것이 정의로운 그리고 공정한 사회이다.

- 시너지 창출원인 흥하는 자들을 제대로 대접하는 길만이 흥하는 자들을 양산함으로써 흥하는 경제를 만들어 내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일류를 일류로 대접함으로써만 더 많은 일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를 일컬어 경제적 차별화원리라 하는 것이다.
  - 중국, 싱가포르, 홍콩 등 역동적인 경제:세계일류기업, 개인들이 몰려들어 경제의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 미국경제:세계 500대기업의 35%이상과 모든 경제사회분야의 세계 최고 일류들의 집산지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

**1) 헌법이 바로서야 발전 친화적 경제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우리 헌법은 균형발전, 경제민주화, 경제력집중해체,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민주주의적 가치를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을 허용하고 있다.(헌법 119조 2항). → 대기업규제, 지역균형발전, 경제민주화
- 헌법이 발전 친화적이기 위해서는 사회민주주의 이념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법 앞의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가 보다 명확히 천명되는 것이 좋다.
- 헌법이 세부적인 국가 정책의 백과사전일 필요는 없다. 대기업규제정책, 중소기업보호정책, 농업보호정책, 복지정책 등등의 세세한 지침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하위법들을 통해 얼마든지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2)**

**2) 균형발전의 이념을 넘어야 지역 균형발전 가능하다.**

- 지방간 발전의 차등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이를 무시하는 수도권규제와 획일적 지방육성정책이 서울공화국을 초래했다.
- 전국에 특성, 기업도시와 공공기관을 안배하고 수도권 기업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발전역행적 평등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 향후 국토 및 지역발전정책: 잘되는 이웃이 있어야 나도 잘 된다: 수도권 규제철폐와 지방에 대한 차등지원, 거점육성 필요.
- 서울 강남이 영남에도, 호남에도 하나씩 생기도록 거점화 전략을 써야 균형발전이 가능해 진다.

###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3)

#### 3) 평준화교육 탈피와 대학간 자율경쟁체제로 수월성교육 회복해야 지식기반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 평준화교육은 수월성교육과 학생과 학교간 차등을 포기함으로써 공교육의 실패를 초래하고, 가난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을 오히려 역 차별하는 “가난의 대물림을 고착화시키는 제도이다.”
- 전국 201개 4년 제 대학이 다 같이 발전할 수는 없다. 앞서가는 대학이 세계일류대가 되고 그와 같은 대학이 더 많이 생기는 과정이 대학발전과정이다.
- 지방 대학인 것이 특권이 되서는 안 된다. 로스쿨 균형 배분 정책도 잘못된 정책이다.

###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4)

#### 4) 부자를 역차별 하지 마라. 선진국은 부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자가 양산되지 않고 선진국이 될 수는 없다.

- 누진세제를 완화하고, 증부세를 완화내지 철폐하고 양도세 등 거래세를 낮추어야 한다. 항구적인 조세감면조치가 필요하다.
- 탈법과 탈세를 하지 않은 모든 부는 다 청부(淸富)이다. 세상에 쉽게 버는 부와 어렵게 버는 부가 따로 있지 않으며 그래서 세상에 불로 소득이란 없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5)**

- 5) 복지정책은 음지탈출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난이 국가로부터 대접 받을 자격이 되고 그래서 가난이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가난하지만 노력하고 그래서 남보다 발전하는 국민을 더 우대해야 한다.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여 노력하는 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고쳐 국민들의 도덕적해이를 최소화 해야 한다.→EITC를 확대
  - 이와 같이 복지정책을 “가난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회정책에서 “향상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발전정책으로 전환해야 서구의 실패를 피할 수 있다.
  - 절대적 취약,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정책은 더 강화해야 한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6)**

- 6) 대기업을 역차별 하지 마라.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 없이 발전도 없다.
- 선진국은 대기업에의 경제력 집중이 심한 나라를 의미한다.
  - 대기업의 투자활동, 경영행태, 기업구조에 대한 획일적 규제는 기업 역동성에 독이 된다.→각종의 획일적 경영규제를 철폐하고 시장감시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 계열사수가 무슨 도덕성이나 경영건전성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 기업내부거래가 시장처럼 투명할 수 없음이 기업의 본질이다. 투명경영규제가 지나치면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기업지배구조(사회이사제도나 내부통제제도)를 지나치게 규제하면 좋지 않다.
  - 성공경영의 정답은 없다. 단지 진화할 뿐이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7)**

**7) 경영민주화 개혁은 기업의 본질에 역행한다.**

기업은 수직적 명령 조직이며 민주화의 대상이 아니다.

- 우리의 노사관계개혁은 노조와 경영자가 동등하게 경영에 참여하는 경영민주화 개혁에 가깝다. 그러나 복수의 CEO를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이 개혁은 기업의 본질에 역행하기 때문에 기업경쟁력에 해가 된다.
-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한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개혁의 실패사례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8)**

**8) 중소기업이라고 특별하지도 않으며, 특별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 중소기업인 것이 특권이 되서는 안되며 오직 잘하는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대접 받도록 해야 한다.**

- 중소기업 육성제도를 완전 개편하여 사회정책에서 발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 중소기업의 법정규모를 확대하여 성장유인을 제공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하에 시행되는 대기업의 경제력 확대를 막는 계열사에 대한 각종규제는 오히려 중소하청기업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 9988현상은 중소기업의 중요성보다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시사한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9)**

**9) 대기업과 부품 중소기업 협력은 대, 중소기업 부문을 분리해서가 아니라 양 부문의 통합을 허용함으로써만 더 원활해 진다.**

- ◆ 계열사 30% 지분을 정책은 홀드 업(Hold up)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 통합을 저해한다.
- ◆ 대기업과 부품중소기업관계는 경쟁관계, 혹은 착취와 피착취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관계다.
- ◆ 소유든 경영이든 서로 공유하는 것이 상생의 기반이 된다. → "나홀로" 전략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 ◆ 국가가 협력을 강제하면 오히려 대기업은 부품 해외수입을 늘린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0)**

**10) 금융산업의 대형화 시급하다. 국내외 자본이 동등한 조건 하에서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직도 관치금융이 없어졌다 하기는 어렵다.
- 금산분리 원칙이 국내자본에 대한 역차별 법이 되어 서는 안 된다. 국내 산업자본이 해외 산업자본이나 심지어 금융자본 보다 더 부도덕하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 산업자본의 상업은행 소유에는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나 비은행 금융산업에의 진출을 막을 논리는 약하다.
  - 4% 의결권허용지분에 대해 실질적인 의결권행사를 인정하고 9%소유지분에 대한 의결권도 허용하는 것이 옳다.
- 성공하는 금융 기업들이 세계적인 대형금융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1)**

**11) 농업을 농민으로부터, 그리고 농민을 농토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 재검토 필요하다.
- 농지거래규제(비농민의 300평이상 소유금지)와 농지이용규제(농업진흥지역규제)를 풀어 농민들의 재산권을 회복시켜 재촌탈농을 가능하게 해주고, 농업부문에 진입을 자유화하여, 농업은 능력 있는 자본에 맡겨야 한다.
- 농촌을 농업현장에서 생활현장으로 바꿔야 한다.
- 농어촌주택에 대한 일가구이주택규제예외인정이 필요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2)**

**12) 부동산소득과 같은 자본소득이 불로소득이라서 정당성이 없다는 국민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불로소득이라면, 주식투자도 돈을 버는 것도 불로소득이다.**

-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투자나 건설업에 대한 과잉규제는 하루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 아파트 건설원가(supply price)를 낮춰줄 수 있는 용지공급의 확대나 주택공급경쟁의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없이 싼 주택을 공급할 지속 가능한 방법은 없다.
- 분양가상한제는 어떤 경제논리로도 정당화 되지 않는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3)**

**13)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지 않는데도, 정부가 서비스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비 정규직을 정규직화 시켜주고, 사회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고용이 늘다는 잘못된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 복잡계 경제는 완전하게 통합된 네트워크 경제이다. 제조 대기업부문이 정체되고 있는데 서비스업만 잘될 수는 없으며,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는데 중소기업만의 투자와 일자리가 늘기는 어렵다.
- 기업의 인력운용을 제약하는 정규직 전환정책이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될 수는 없으며, 사회적 일자리 만들기는 내가 낸 세금에서 내 봉급을 받아 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다. 단기 처방이상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4)**

**14) 역량 있는 자본의 투자 없이 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수는 없다. 투자할 능력이 있는 기업의 투자를 막아 놓고 서비스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은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금융, 의료, 교육, 관광, 정보통신, 언론방송, 영화, 문화 어디든 자본력과 경쟁력이 확인된 기업이 진출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 서비스업종은 중소기업 업종이어야 한다거나 대기업의 문어발이 문제라는 이념에서 벗어나지 않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법은 없다.
- 공공성확보가 문제라면 사후 행위규제를 통해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5)**

15) 미래첨단산업이나 녹색성장산업이라는 유망산업은 우리나라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것도 성공해야만 우리나라 산업이 될 수 있다.

□ 유망하다고 정부나 중소기업이나 아무 대기업이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강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참여해도 다 성공하지 못한다. 단지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이다.

□ 녹색성장산업육성에 차별화 육성원리를 적용해야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산업정책은 성공하는 기업을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6)**

16) 사회가 남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성과를 내어 남에게 교훈과 노하우, 즉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제주체들의 편이 되면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결과평등을 위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규제가 늘어나게 되고 실패는 양산되고 발전은 정체된다.

□ 앞서가는 사람들을 역 차별해서는 안 되며 그늘진 곳의 사람들을 도움에 있어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야 한다.

□ 중소기업, 농민, 취약계층 등 음지의 국민들을 돕는다는 것이 음지에서 안주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양지로 나오도록 돕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성공 친화적인 법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 정치적으로 쓴 약이지만 성공하는 자를 우대하는 길 외에 국민 성공시대를 열 방법은 없어 보인다.

**VI-2. 공식적 법 제도를 발전친화적으로 개혁해야 한다(17)**

**17) 정부개혁은 규모축소에만 매달리면 실패한다.  
동시에 정부의 기능이 무엇인지 옳은 일을 하도록  
해야 성공한다.→정부의 차별화 기능이 중요하다.**

- ◆ 시장은 차별화 장치이다. 정부 또한 이러한 시장  
의 기능을 보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제시스템을  
조성해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 정치적인 이유로 시장의 차별화 기능에 역행하여  
차등을 없애려 하면 시장은 반드시 보복한다. →재  
분배정책도 도가 심하면 반드시 위기에 직면한다;  
주택금융위기, 서구의 재정위기 등,
- ◆ 산업정책은 차별화하여 흥하는 기업을 앞장세워  
야 성공한다.

**VII. 공정한 법과 집행으로 법 앞에 평등한  
공정사회를 실현해야(1)**

- 1). 공정한 사회란 법 앞의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 시장경제의 결과는 운칠기삼이다.→어느  
누구도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지 못한다.
  - 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  
만 아무도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 줄 수는  
없다.
  - 기회마저도 노력하는 자에게만 오는 법이  
다.

## VII. 공정한 법과 집행으로 법 앞에 평등한 공정사회를 실현해야(2)

- 2) 경기규칙의 내용과 집행이 공정해야 사회가 고(高)신뢰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
- 법의 내용이 공정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의 공정은 이룬 만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조하여 흥하는 이웃이 그에 합당한 만큼 부를 쌓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 “발전친화적인 규칙”과 “공정한 규칙”은 같은 의미이다.
  - 법 집행이 공정해야 한다. 법 앞에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공정, 신뢰사회의 기초이다.

## VII. 공정한 법과 집행으로 법 앞에 평등한 공정사회를 실현해야(3)

- 3) 기회균등, 공정의 이름으로 경제발전정책을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경제발전정책은 우수한 경제주체가 더 잘하도록 동기 부여하고 자원이용 기회를 더 많이 주어 발전을 가속화 → 모두 발전하지만 모두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 사회정책은 성과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정책으로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해 → 사회정책이 일반화되면 경제의 역동성은 사라지고 유럽의 실패한 복지를 답습
  - 산업, 기업, 지역육성은 철저히 성과에 기초하여 지원하는 경제정책으로 접근해야 발전
  - 사회정책은 “생존능력이나 일할 능력 없는 취약계층”에 한정된 정책으로 추진해야 경제발전과 양립 → 복지정책도 음지탈출을 도우는 발전정책으로 전환되어야 경제발전과 양립가능.



## VII. 공정한 법과 집행으로 법 앞에 평등한 공정사회를 실현해야(4)

- 4) 공정사회 이름하의 우려되는 정책들
- 대기업규제와 중기우대정책: 기회균등의 이름으로 결과평등 조장?
  - 지역균형발전정책: 기회균등이라는 이름하의 결과평등 추구?
  - 사회균형/서민중시정책: 역시, 기회균등이름으로 결과 평등추구?
  - 교육평준화:기회균등, 공정기회라는 이름으로 교육결과평등 추구하는 전형적 정책
  - 공정사회의 이름으로 전국민 보편적 복지정책을 도입한다?

## VII. 공정한 법과 집행으로 법 앞에 평등한 공정사회를 실현해야(5)

- 5) 평등과 사회주의적 이념이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공정은 결과의 평등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함 : 법 앞의 평등을 지속 전파해야

### VIII. 일자리 없음이 만병의 근원이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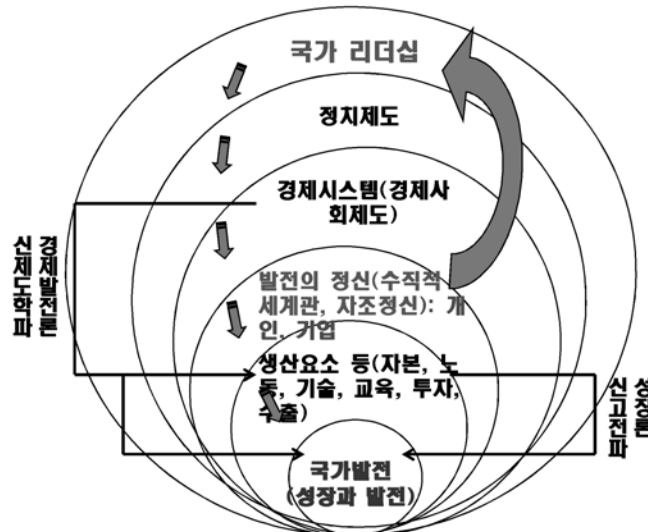
- ◆ 임금근로사회의 만병은 실업에서 온다. → 공정사회니 평등사회니 정의사회니 양극화니 하는 문제 제기는 결국 일자리 없는 문제에서 연유한다.
- ◆ 일자리 문제는 경제문제이다. 경제발전정책으로 접근해야 답이 있다. 사회정책으로 접근하면 모두의 불행을 가져온다.
  - 모든 경제제도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에 유리하게 조성해야 한다.
  - 정부도 NGO도 아닌, 기업과 기업의 투자가 대접 받는 경제만이 일자리 천국을 만들 수 있다. → 일자리 만드는 기업의 생각은 무시하고 명분론에 치우친 정책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 VIII. 일자리 없음이 만병의 근원이다(2)

- ◆ 경제시스템의 개혁은 일자리창출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노동시장유연성문제: 정규직해고의 부자유, 비 정규직과 청년실업 양산, 저 출산 문제
  - 경제활동규제: 대기업규제, 국내대기업역차별, 수도권규제, 해외투자 촉진하는 규제,  
→ 좋은 일자리를 해외에 수출하는 국내 경제시스템문제를 풀지 않는 일자리 정책은 연목구어

## IX. 경제시스템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누가 이끌 것인가?(1)

국가시스템 개혁과 국가 리더십의 역할



## IX. 경제시스템선진화를 위한 개혁은 누가 이끌 것인가?(2)

- ◆ **경제발전의 선 순환구조:** 국민의 이념 → 리더십 선택/돌연변이 → 발전친화적 리더십 → 발전친화적 정치시스템 → 발전친화적 경제시스템 정착 → 발전친화적 이념정착 → 국민경제의 발전 → 발전친화적 이념 → 발전친화적 리더십: 경제발전의 선 순환구조 정착
- ◆ **경제정체의 악순환구조:** 국민의 이념 → 리더십 선택/돌연변이 → 발전역행적 리더십 → 발전역행적 정치시스템 → 발전역행적 경제시스템 정착 → 발전역행적 이념정착 → 국민경제의 정체 → 발전역행적 이념 → 발전역행적 리더십 → 발전역행적 정치, 경제시스템의 고착화: 경제발전의 악 순환구조 정착 → 중진국 병, 선진국 병

## ■ 주제발표 2 :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 1. 지난 10년의 한국 산업성장 평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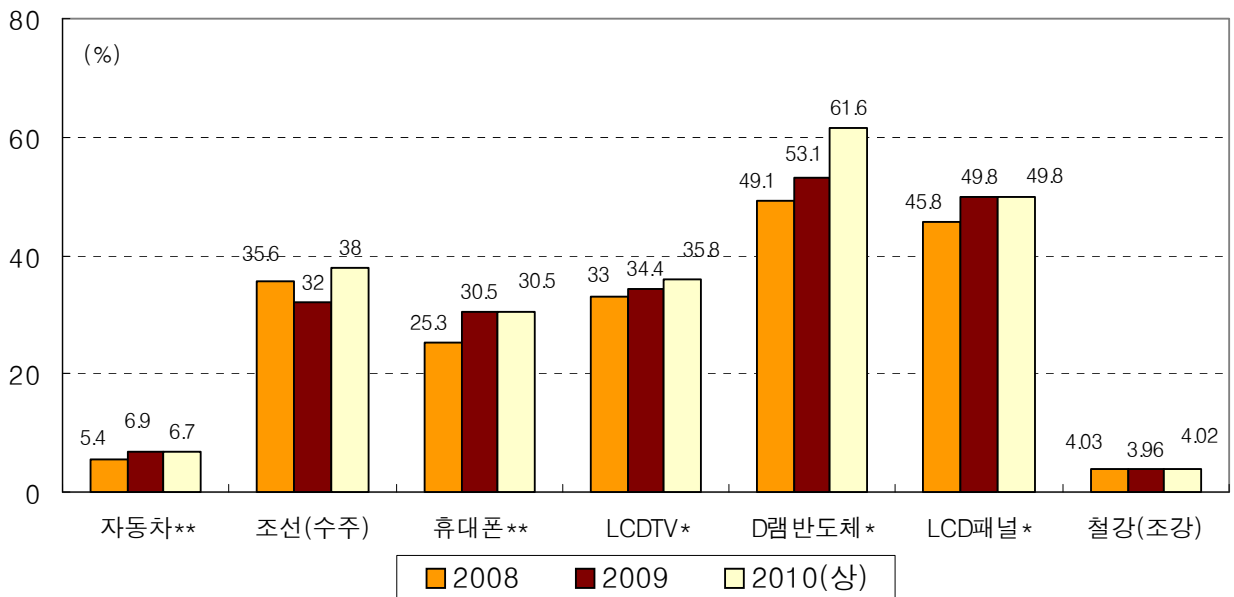
#### (1) 산업성장의 평가

##### □ 한국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 및 외부의 긍정적 평가

○ 우리 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을 강화해 왔으며, 특히 최근 리먼사태 이후에도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주력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대부분 상승하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산업경쟁력 기반이 지난 10년 동안에 한 단계 높아졌음을 반영함(참고 1).

<참고 1> 주요산업의 세계시장점유율 추이



주 : \* 매출액, \*\* 판매량 기준

- 특히 자동차, 디지털 TV,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는 첨단기술력 축적, 시장 지배력 향상을 바탕으로 최근 세계시장 점유율이 괄목하게 향상되었음.

○ 2010년 이후에도 긍정적인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전경련의 최근 전문가조사에 의하면('10.10.27), 8대 주력수출업종 중 자동차, 기계, 휴대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은 2015년 세계시장점유율이 현재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
- 한국산업의 외형적 성장세도 주목되는바, 수출순위는 2009년 세계 9위에서 금년에는 두 계단 상승한 7위로, 무역수지도 사상최대인 410억 달러의 흑자가 될 전망이다. (무역협회, '10.10.29).

○ 한국 산업의 성과에 대해 해외언론의 평가도 비교적 긍정적임.

- 미국시장내 자동차 경쟁력 강화, 전자산업의 글로벌 시장지배력 강화 등에 힘입어 서방 언론은 물론 경쟁국 일본에서도 한국 성공요인에 대한 분석기사가 이례적으로 다수 보도됨(참고 2).

**<참고 2> 해외언론의 한국경제 위기극복 평가**

- 한국기업에게 배우는 5가지 포인트 : 역경은 도약의 호기, 성장분야 집중, 기술보다 고객의 요구상품을, 세계시장으로, 좋은 방식을 자기 것으로 (닛케이비즈니스, '10. 1.25)
- 세계시장에서 한국기업의 도약이 두드러진다. 전략사업의 강화가 과실을 거두는 모습이다. 비결중 하나는 스피드 경영(일본경제신문, '10.5.9)
- 한국경제 왜 강한가? (기업의) 스피드 경영, 개발투자와 설비투자, 고품질로의 전환, 적극적 신흥국 개척, 헝그리 정신, (정책의) 리더십, 대규모 공공투자, FTA 적극추진 (일본 주간동양경제, '10. 7.31)
- 쏘나타, 올해의 최고의 차 Top 10 선정.(美 자동차전문지 Car & Driver, '10.11.26)

□ 지난 10년 성장의 원동력은 구조고도화 및 체질개선, 한국식 경영이 핵심

○ 지난 10년의 산업성장은 외환위기 이후 부단한 구조조정 노력과 재무건전성 강화로 수익구조 개선이 주된 배경임.

- 외압적 구조조정이 '자발적 구조조정'으로 전환되고, '재무개선 노력'으로 부채비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체질 개선에 성공함(자동차: 1,576→116%, 가전: 139→76%)
-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캐시카우를 발굴함 : 소형차 역량을 중형차로 확대(자동차), 프리미엄폰 집중 출시(휴대폰), 선제적 차세대투자(디스플레이/반도체), 경량신소재 개발(철강, 화학)

○ 한국식 경영(Korean Way)이 본격적으로 개화되기 시작한 점은 산업의 글로벌화를 크게 촉진함.

- '스피드 경영'으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단행함으로써 일본과 대조적인 경영방식을 전개함.
-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여 SCM 투자(대내적)와 마케팅 현지화, 유통망 강화(대외적)를 병행함.
- '제품 포트폴리오 차별화'를 적극 추진하여 프리미엄 제품 강화, 제품 다양화, 맞춤형 제품 확대 등의 전략으로 트렌드를 주도하면서 고객수요를 적기에 흡수함.

○ 신흥시장 진출 강화를 통한 '시장 다변화'는 신흥국에서의 대응력과 수출경쟁력의 강화에 크게 일조하였음.

- 국내시장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세계시장을 목표로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신흥시장에서의 사업기반이 비교적 견조함.

· 그 결과 대개도국 수출비중은 66%('07)에서 72%('09)로 크게 상승함.

○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도 대중국 수출증가를 유발하면서 한국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중국의 지난 10년('00~'10) 수입은 연평균 19.5%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이 기간중 연평균 16.6% 증가함.

- 지난 10년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57억달러('00)에서 449억달러('10 전망)로 크게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전체 흑자에서 차지하는 대중국 흑자의 비중은 2000년 50% 미만이었으나 2010년 90% 이상으로 대폭 상승됨.

## (2) 전환기 혁신 주도, 상시 위기의식이 지난 10년의 시사점

○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향후 10년의 지속성장을 위해, 한국산업은 두 차례의 위기극복 경험을 유용한 길잡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전환기는 시장판도 변화를 주도할 기회 : 트렌드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피드 및 유연성'의 강화가 요구됨.

- 가장 확실한 혁신은 상시 구조조정 : 핵심사업의 경쟁력 유지와 동시에 핵심사업을 활용하는 '차세대 분야' 발굴에 주력해야 함.

○ 위기와 기회는 반복되므로 글로벌 경쟁이 더욱 심화될 다가올 10년은 상시적인 위기의식, 혁신 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폭스바겐, 캐논, IBM, 신일본제철, BASF, 애플, 시스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을 달성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통점은 핵심역량 보유와 지속적 혁신임.

## 2. 현 시점의 산업적 중요성 및 기회와 위협

### (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현 시점의 산업적 의미

○ 현재는 제도약(renewal)의 시대적 요구가 커지는 산업 패러다임의 대전환기로서 산업의 변곡점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음.

- 향후 10년의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3대 키워드는 변화 속도, 불확실성, 가치 창조임.
- 외환위기 이후의 지난 10년과 리먼사태 이후의 향후 10년은 전혀 다른 산업환경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력이 필요함.

○ 산업혁신은 기술에서 '고객 가치' 중심으로 개념이 전환되고 있음.

- 공급자(push)→ 수요자(pull)→ 공급자의 돌파기술(breakthrough), 기술→ 콘텐츠, 과잉형→ 가치형·지능형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등 고객중심의 혁신이 확산됨.

○ 세계시장은 커다란 '구조적·질적 전환기'에 진입하기 시작함.

- G7 중심에서 G20 중심으로 이행하고, 선진국 대신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시장이 세계시장의 성장을 리드할 것임.

○ 경쟁의 틀은 산업·제품간 경계가 와해되면서 '개방형 융합경쟁 시대'가 되었으며, 게임의 결과도 승자 독식형에서 '상생형'으로 변화중임.

- 도요타의 잠재적 경쟁자가 애플, 구글이나 배터리기업이라는 점은 경쟁의 틀 변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임.





- 한국 제조업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선진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면서 선진국 제조업을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확대될 수 있음.

□ 위협요인 : 선진국 시장의 쇠퇴, 일본산업의 재반격, 차이나 리스크 및 중국의 전략산업 육성강화

- 재정수지 악화, 성장 정체 등 선진국의 경제침체가 지속될 전망이다. 점은 향후 상당기간 우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재가 될 것임.

- 반면, 일본기업들은 신흥시장에 대한 진출전략을 대폭강화하면서 신흥 시장에서 우리기업과의 경쟁을 한층 격화시킬 전망이다.

- 일본의 20개 대기업의 해외매출 중에서 신흥국 비율은 2008년도 1분기 38%에서 2010년도 2분기 46%로 확대됨으로써 신흥시장 전략 강화의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함.(일본경제신문, '10.11.27)

- 중국의존도가 큰 우리나라로서는 차이나 리스크가 위협적이며, 7대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정책을 추진하면서 급성장할 전망이어서 중국 내수시장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전망이다.

- 중국은 이미 태양전지, 전기차 분야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기존 첨단시장(가전, 3D TV, 자동차, 콘텐츠 등)에서도 선두 경쟁기업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놓고 있음.

□ 일본 산업 침체의 교훈

- 일본 제조업의 글로벌화 실패, 4가지 이유 (하버드비즈니스리뷰, 2010. Sep.)(참고 3)와 시사점

- 첫째, 자사 방식의 심취(Devotion to the way) → 상시적 위기의식이 필요
- 둘째, 세계 경쟁에서 고립된 국내시장(Isolated domestic market) →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셋째, 순응적인 인력(Docile workforce) → 다양한 인재의 융합 및 관리능력이 조직역량을 더 강화
- 넷째, 균질적인 최고경영진(Homogeneous team at the top) → 순혈주의보다 앞으로는 글로벌 경영진이 경쟁력 강화에 더 기여

○ 일본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주는 핵심적 교훈은 전략·인재의 글로벌화, 돌파형 기술역량, 건전한 생태계, 적정·적기 투자 등의 중요성 인식임.

- 양적 성장 지향 : 일본기업은 오랜 세월을 걸쳐 매출 확대에 의존한 수익모델을 전제로 경영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10.6.17)  
→ 내수시장 성장에 큰 기대를 걸 수 없기 때문에, 내수형 기업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전개를 지향해야 함.
- 프리우스 이외의 히트상품 돌파구는 외국기업에 의한 것인데, 소니 워크맨 이후 일본에는 돌파형의 기술이 감소 (일본경제신문, '10.7.19)  
→ 지나치게 시장 친화적, 소비자 지향적인 신제품 개발은 획기적인 기술혁신 역량의 결여를 야기할 수 있음.
- 경영전략 면의 원인은 글로벌화 지연, 고기능 제품을 고집한 갈라파고스화, 첨단제품이 commodity화한 후의 전략 취약성 등 (일본경제신문, '10.8.12)  
→ 순혈주의보다는 글로벌 인재 등용, 제조만이 아닌 사업시스템을 구성하는 생태계 전반의 건실화 등이 더욱 중요한 시점임.
- 공격적 설비투자 기피 : 일본기업이 약화된 것은 적기의 설비투자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며, 반도체나 LCD패널에서 한국에 완패한 최대 원인의 하나는 '과소투자' (닛케이비즈니스, '10.10.11)  
→ 과감한 선행투자를 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 구축이 중요함.

### 3. 향후 10년 한국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응방안

#### (1) 지속성장의 전제조건 : 위기의식, 경제시스템 유연성, 기업가정신

○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향후 10년의 산업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함.

- ①산업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기업간·업종간 합종연횡이 더욱 빈번해지고, ②경쟁구도가 제품·기업간에서 생태계간으로 전환되며, ③차별적 비즈니스 모델의 보유여부가 향후 생존에 영향을 미치며, ④ 신흥시장이 매우 중요해지는 등 과거 10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경쟁환경에 노출될 것임.

- 이러한 환경의 급변은 디지털시대에서 스마트시대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이므로 이를 염두에 둔 경쟁력 제고전략을 구상해야 함.

· (생산 관점)기업이 아닌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제품·서비스를 만들어야 하며, (마케팅 관점)단독이 아닌 다수의 파트너십으로 상호 강점을 시너지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 관점)내부 기술·역량 자체의 활용보다는 먼저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 할 것임.

○ 국가경제 시스템의 유연화도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할 것임.

-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특히 금융산업, 노동시장 등에서의 효율적 시스템이 필요함.

- 사회적 갈등구조의 완화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리더십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산업의 지속성장은 기업의 투자가 전제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마인드가 필요하며, 정부도 민간의 혁신성을 장려하는 미국의 조세체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향후 10년의 전혀 다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업계 CEO에게는 어느 때보다 유연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기업가정신이 요구됨.
  - 잠재수요에 대비한 적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요의 급격한 회복이나 확대 시 시장수요에 적기 대처할 수 없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점유율 하락이나 시장지배력 약화를 초래할 것임.
- 수익성 제고에 집착한 결과로 나타난 일본의 최근 수년간 '과소투자 후유증'을 상기할 필요가 있음.
- 신수종 사업의 개발을 위한 기업문화의 형성이 중요함.
  - 과거지향적인 지식위주에서 미래지향적인 상상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창의적 혁신을 개화시키는 조직문화가 중요한 기업자산이 될 것임.
  - 지나친 단기 성과주의를 지양하고, 창의적 인재의 양성에 주력함.

## (2) 지속성장을 위한 기본 전략

### □ 향후 10년을 겨냥한 글로벌 포지션의 재설정

- 그동안 우리나라는 추격자 입장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구조조정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의 성장전략은 경쟁력 위상변화를 고려하여 전략적 포지셔닝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향후 10년에 대응하는 한국산업의 리포지셔닝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시장지배력을 높인 산업(전자)은 시장선도자(market leader)로 발전하고, 선발자와 격차를 줄인 산업(자동차,기계)은 신속한 추격자(fast follower)로 재설정하며, 상대적 후발산업(특수소재/정밀화학)은 수요밀착형 협력자(strategic partner ship) 관계로 포지셔닝을 설정할 필요

- 산업의 리포지셔닝 설정을 통한 향후 10년의 4대 핵심과제는 ①주력산업의 확고한 글로벌 시장지배력 구축, ②신성장동력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 및 시장선점, ③신흥시장 차별화전략 강화, ④서비스업 육성

□ 경쟁심화가 예상되는 신흥시장 대응전략 강화

- 선진국형에서 신흥국형으로의 비즈니스 전략 전환이 요구됨.

-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G20 시대에 돌입했으며, 이는 선진국 중심으로 부터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신흥국 중심의 경제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 신흥시장에서는 과거보다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므로 더욱 혁신적인 현지화 전략의 전개가 요구됨(참고 4).

**<참고 4> 중국의 신흥시장 전략을 강화하는 경쟁국 기업의 최근사례**

- 일본 도시바는 동남아 등 신흥시장 목표의 맞춤형 LCD TV를 출시하여 신흥시장 점유율 제고전략을 본격화('10. 11.30).
- 미국 포드는 저가격의 소형차를 생산개시하면서, 인도 시장점유율이 1%에서 4%로 단기간내 급등('10, 3월)
- 일본 도요타도 인도 자동차시장 공략을 위해 신흥시장용 저가 소형차 발매를 개시('10. 12.1)

- 일본, 중국 등 주요경쟁국 기업들의 중국내수 및 신흥시장 전략 강화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한국식 글로벌 경영 마인드 외에 새로운 혁신성을 가미해야 함(참고 5).

**<참고 5> 일본 주요기업들은 해외매출 비율의 제고를 목표로 설정**

- 파나소닉 : 2009년 48% → 2012년 55%
- 히타치 제작소 : 2009년 41% → 2012년 50%초
- 도시바 : 2009년 55% → 2012년 63%

○ 특히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특별한 진출전략이 필요함.

- 일본처럼 선행적 기술개발·제품화 전략을 강화하여 ‘가치사슬 초기단계의 고부가 시장’을 선점하는 대신, 규모 경제가 작동하는 시장은 중국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경쟁구조를 전환함이 바람직함.
- 복잡하고 까다로운 ‘현지 유통망의 확보’는 시장의 실질적 접근을 위해 매우 중요한 방안임.
  - 중국의 경우 우리 기업들은 2, 3급 도시의 유통망 확보 애로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고급형, 보급형으로 이원화한 ‘현지시장용 브랜드의 차별화’를 통해 스펙트럼이 넓은 수요계층을 폭넓게 흡수함.
- 기존의 진출방식에서 탈피하여, ‘생산·개발의 현지화 및 합작’을 강화하여 현지수요에 대한 유연한 대응력을 제고하며, 나아가 역혁신기지화(reverse innovation)를 강화함.

□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의 균형성장 중요

○ 현재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은 성숙단계로 접어든 산업이 다수이고 선진 시장의 성장이 크게 둔화된 상태이므로 주력산업 활력제고와 신성장동력 확보라는 이중의 대응이 요구됨.

- 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존분야에서의 ‘더욱 강해진 주력산업 경쟁력’과, 이를 레버리지로 한 ‘신성장동력의 발굴’을 통해 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 현재의 주력분야가 향후 10년 동안에도 산업 중추의 역할을 담당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3) 한국 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제고 전략

지속성장을 위한 산업경쟁력 제고전략 개요

	전통 주력산업	신성장동력	서비스산업
국내 시장	-산업융합 분야 적극 개발 및 시장창출 지원 -혁신적 기술개발	-전략적 우선순위별 집중육성 -민간의 선제적 투자 및 여건조성 -경쟁력있고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집중 육성 -의료, 디자인 등 수출산업화 기능분야의 육성 -생산성 향상
선진국 시장	-프리미엄제품의 특화 -브랜드 파워 강화 -마케팅 현지화 -현지기업과의 제휴	-원천기술 보유기업과의 제휴 및 M&A -SW·콘텐츠 공동개발	-근면하고 유연성 높은 우수인력을 바탕으로 선진국시장 진출
신흥 시장 (중국)	-현지유통망 확보 -브랜드 차별화 -생산·개발의 현지화 및 합작	-신산업육성용 부품 및 장비의 수출확대 -국내생산과 연계한 현지생산도 병행	-유통과 제조업 동반진출 -개인서비스업 시장개척 -틈새시장 공략 -맞춤형 콘텐츠시장 개척

□ 질적 성장 전환을 통한 주력산업의 제도약 기반강화

○ 양적 성장시장의 대응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스마트화·그린화 등에 대응한 '질적 성장시장'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 점에서 산업융합의 활성화는 주력산업의 제도약(renewal)을 촉진시키는 강력한 대안임.

- 성숙기에 접어든 우리 주력산업의 새로운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며, 향후 주력산업의 융합화 대응이 미흡할 경우 미래의 융합 신시장(프리미엄시장+신시장) 상실의 우려됨.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기존산업 성장주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품·산업의 창출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산업융합은 주력산업의 영역을 확장하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아울러, 새로운 트렌드에 대처하여 주력산업은 브랜드 파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객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자동차산업은 고급브랜드 런칭, 전자산업은 혁신적 융합·모바일 제품 강화, 소재산업은 수요자에 대한 최적 공급시스템 구축과 녹색제품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신성장동력의 선행투자 및 산업생태계 조성

○ 신성장동력 발전을 위해서는 '선제적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임.

-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을 통한 성장기반 구축이 시급하며, 정부는 금융 등 인프라 조성 및 초기시장 창출을 통한 리스크 축소에, 업계는 시장예측에 기초한 과감한 선행 투자가 필요함.
- 신성장동력의 육성은 국가적 역량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효율성 차원에서 중간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조기성과가 기대되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집중투자가 바람직함.

○ 특히 신성장동력 분야의 초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저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순환적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함.

- 단일 신산업(스타브랜드) 중심으로 개별적인 발전전략을 구상하기보다는 전후방 산업까지를 하나로 묶어 육성하는 산업생태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핵심부품·소재, 장비, 콘텐츠, 미들웨어 플랫폼, 유통·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의 동반성장은 신성장동력 경쟁력을 더욱 높여줄 것임.

○ 초기단계부터 수출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는 '전략시장 진출'을 고려하

는 병행전략을 추진함으로써 효과적 비즈니스 모델 수립과 시장선점, 양산효과를 제고해야 함.

- 참고로, 도요타는 고도의 생산기술이 요구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국내와 거의 동시에 중국에서도 2012년초 생산하기로 결정하여 세계시장 우위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 제조업과 서비스 간 연계를 통한 전략적 서비스업 육성

○ (서비스업 육성분야) 서비스산업의 발전이나 생산성 제고는 단기간내에 달성할 수 없고 경쟁우위 요소도 열세인 현실을 고려할 때, 새로운 분야보다는 기존의 기본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발전시키는 전략이 성공가능성을 높일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제조업과 연계되는 분야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우수한 IT기술 등의 강점을 활용하여 '주력상품 + 파생서비스' 결합의 복합분야 등 선진국과 차별화된 서비스산업에 특화할 수 있을 것임.

○ 우리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결합·연계를 통해 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함.

-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내수시장이 선진화되면서 새롭게 형성되는 서비스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인 예는 항공기 MRO 산업, 도시개발 산업, 의료서비스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밖에 지능형 건축물, 인터넷판매, 헬스케어, 유통 및 물류 시스템, 디자인

및 컨설팅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분야는 매우 광범위함.

- 선진국 제조기업들도 서비스 부문을 확대하여 제조업의 서비스화, 서비스업의 제조업화를 강화하고 있음.
  - IBM의 서비스사업 비중 : 27('03년) → 57('09년)
  - 한국 제조기업(서비스업 진출 제조기업 61개사)의 서비스부문 매출비중 : 7.4('03) → 6.2%('07)

○ 제조업관련 서비스산업의 대중국 진출을 강화함.

- 한국 상품의 판매에서 현실적인 큰 장벽인 현지 유통시장의 확대가 시급하며, 제휴 및 한국 유통기업의 진출 등 유통채널의 확충은 출한국 제품의 수출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국시장에서는 중산층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개인 서비스업도 잠재시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결혼 대행, 음악·체육 개인교습, 행사지원 토털서비스, 미용 등

○ 근면하고 적응력이 뛰어난 한국민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틈새 서비스업'을 발굴하여 육성함.

- 정보제공업, 업무·특정기능 대행사업, 노인계층 간호업, 국제업무 지원업 등 우리 특성을 살리는 가능성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수출산업화함.

##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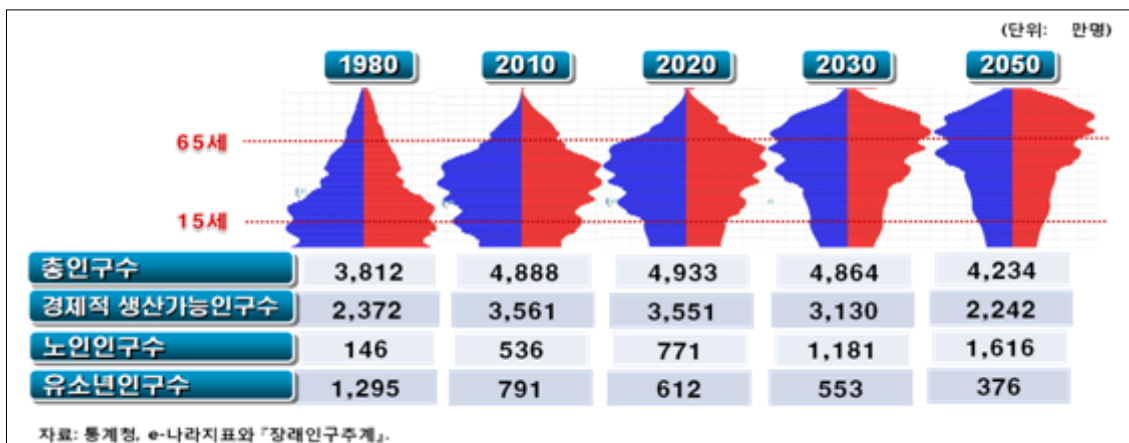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1. 저출산·고령화 전망

○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변화

- 1960년 이전까지는 높은 출생률 및 사망률로 인하여 전형적인 피라미드형이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항아리형으로 변화
-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수준의 향상, 보건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사망률이 저하되고 기대수명이 연장되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반면, 정부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저하
- 고령화율은 2010년 현재 11.0%이나 2050년 38.2%에 이를 것으로 전망
  - 현재는 생산가능 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것으로 전망되어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
  -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659만명)가 15세 미만 유소년인구(654만명)보다 많아지는 '인구역전현상'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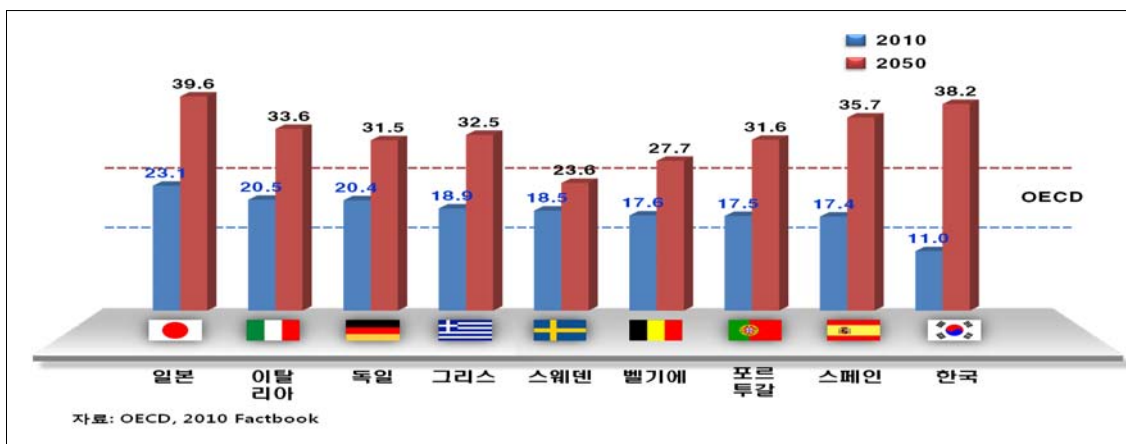
<그림 1> 인구구조의 변화



○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을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현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2050년경에는 가장 심각한 상태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

- 201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1.0%로 OECD국가 중 멕시코(5.9%), 터키(6.3%)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임(OECD 평균 14.8%).
- 그러나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38.2%로 급증하여 일본(39.6%) 다음으로 65세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OECD 평균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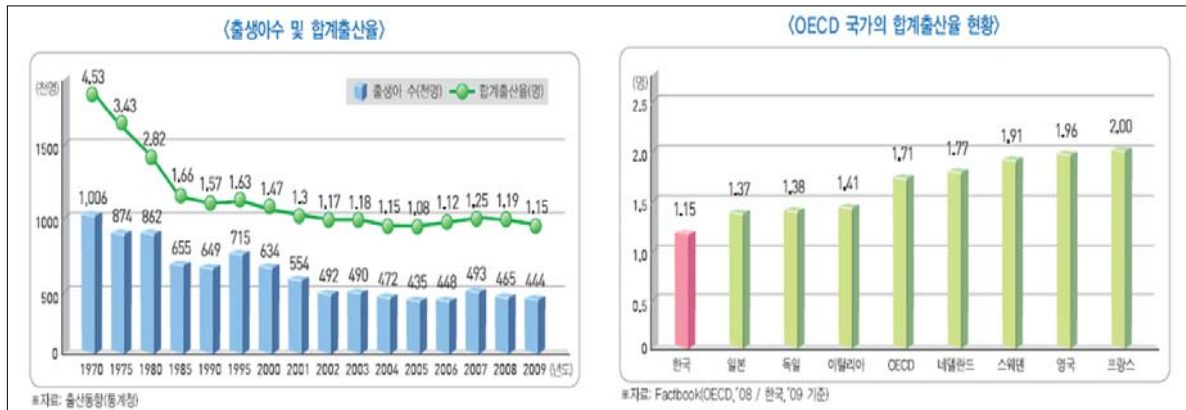
<그림 2> OECD 국가의 고령화율 전망(2010-2050)



○ 우리나라의 초고령화는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기인함.

- 1990년대 중반 1.6명 수준(OECD 평균)에서 2005년 1.08명까지 감소, 이후 2006년 1.12명, 2007년 1.25명, 2008년 1.19명으로 증감 반복
- 현재 출산수준을 유지할 경우 우리나라 총인구는 2018년(4억 9340만명)에 정점을 이루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그림 3> 합계출산율 변화



## 2. 저출산·고령화의 파급효과

###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하여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빠르게 나타남.
  -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가속 전망
  - \* 25~49세 비중은 2005년 59.6%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에는 44.4%로 하락하는 반면, 50세 이상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동기간 20.5%에서 40.9%로 급증할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노동공급의 감소와 투자·소비지출 위축으로 총수요와 총공급에 모두 악영향을 미침.
  - 내부소비가 위축되어 60대 이상 가구 소비규모는 40대 가구의 65%, 50대 가구의 70% 수준이며, 고령인구 증가는 저축률 감소에도 영향
  - \* 생산가능인구 고령화: 38세('05) → 41.8세('20) → 43.1세('30)

### ○ 잠재성장률 둔화 및 고용률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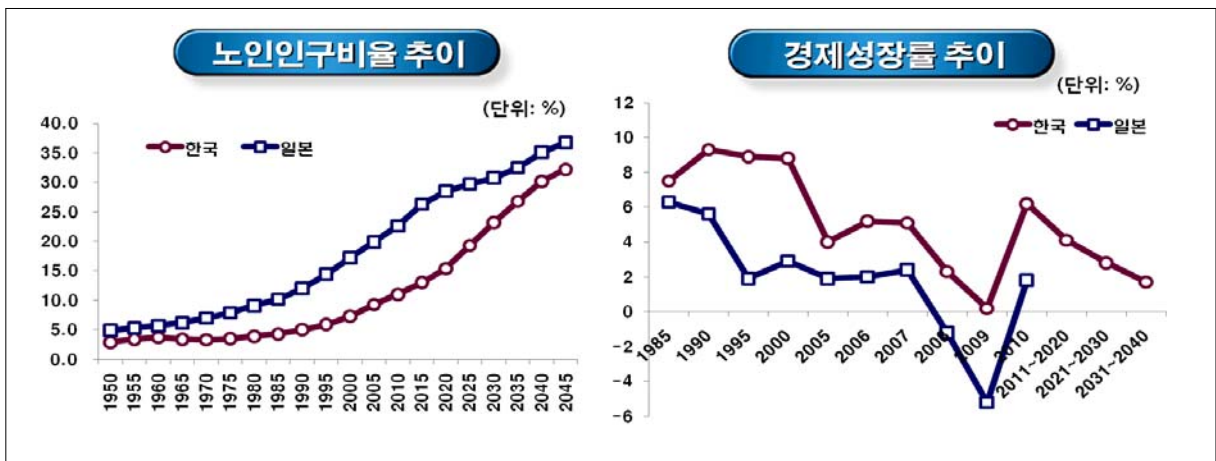
- 저출산·고령화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의 가장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고용 및 성장기반의 약화 소지 가능성 존재

- 인구구조의 변화는 잠재성장률 저하 및 재정여건 악화, 교육·주택·금융 등 수요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
- 10년 후 고용율은 1.2%p 하락할 전망이며, 동기간 한국의 인구증가율은 감소(1.12%→0.32%)하고 노인부양비는 상승(15%→22%)할 전망

○ 우리나라의 향후 10년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일본의 1990년대 변화추이와 유사할 것으로 전망

-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2000~2050년의 50년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평균 2.9%, 일본은 동기간 1%대로 전망

<그림 4> 한-일간 노인인구비율 및 경제성장률 추이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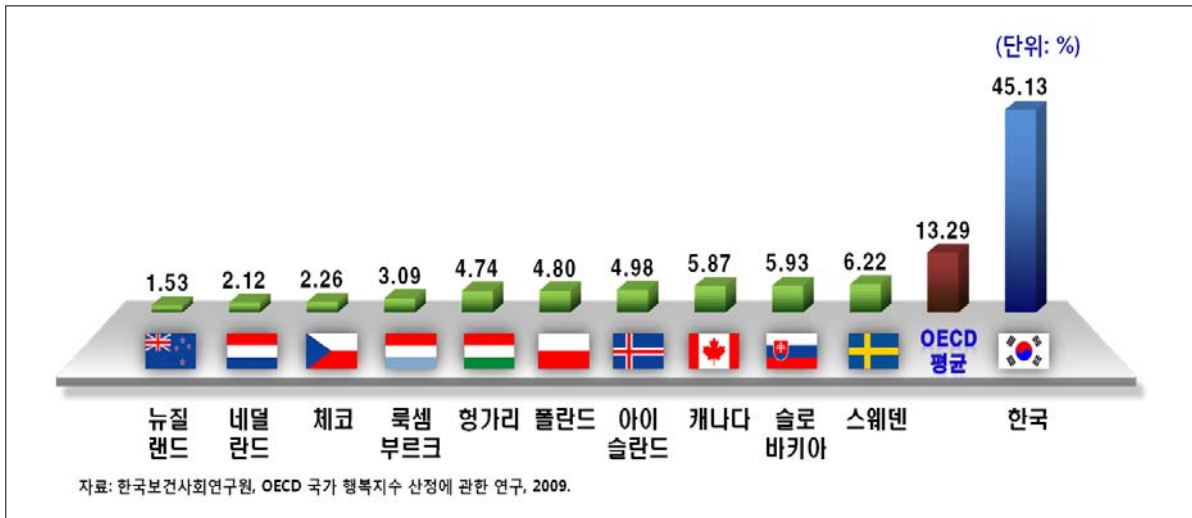
자료: 유엔, 「세계인구추계」, 2008.

○ 노인빈곤율 증가 우려

-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기가 매우 높아 전체 인구 대비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음.
-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노후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 국가(평균 13.3%) 중 가장 높은 수준

- 베이비붐 세대는 노후대비 보유자산이 적어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은퇴 후 퇴직금으로 부채를 탕감하고 남은 금융자산이 은퇴 전 연봉에 비해 적어 노후의 삶의 질 하락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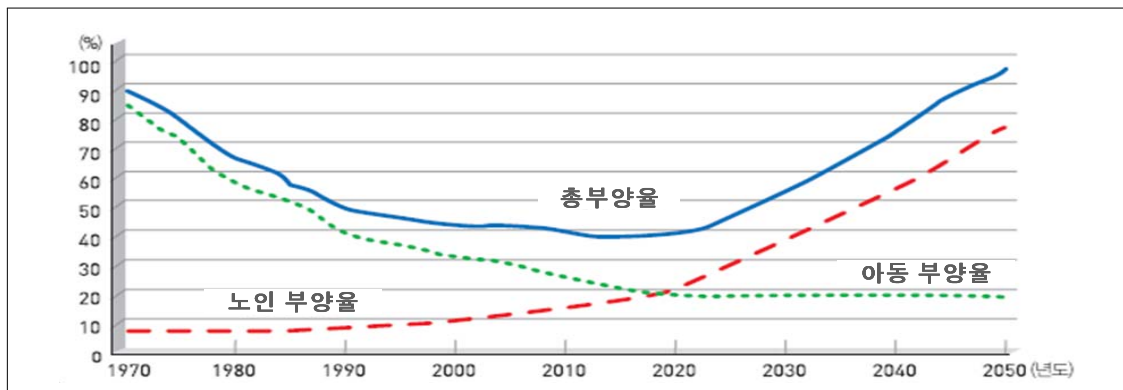
<그림 5> OECD 국가간 노인빈곤율 비교



○ 노인 부양부담의 증가

- 인구감소에 따라 총 부양율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노년부양비도 2010년 37.2%에서 2050년 72% 수준으로 급증

<그림 6> 인구구조에 따른 부양율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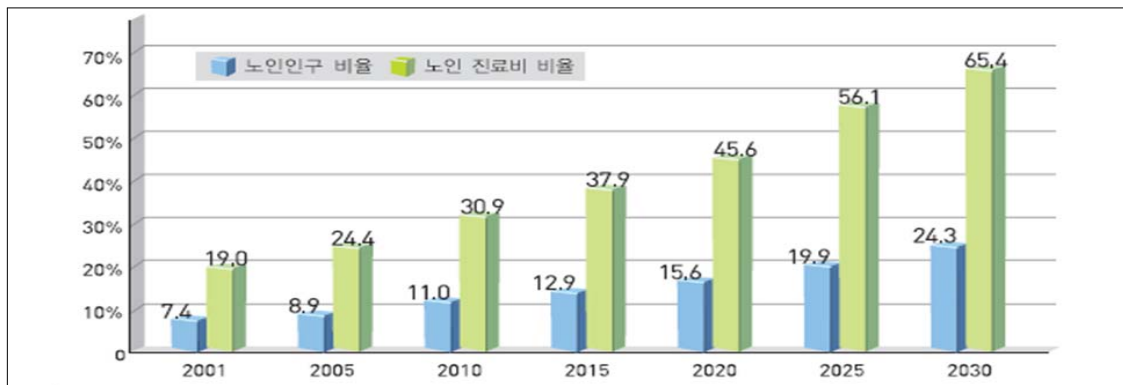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주: 1) 총부양율=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아동과 노인을 더한 인구의 비율
- 2) 노인부양율=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 비율



- 고령화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아동 및 가족급여, 그리고 교육관련 지출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전체 공공지출규모에 영향을 미침.
- 노인인구 부양부담 가중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되고 세대간 갈등 야기
- 연금가입자는 2014년 1,877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여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저하
-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구조의 악화 예상
- \* 2030년 24%를 차지하는 노인인구가 총진료비의 65% 차지할 것으로 예측

<그림 7> 노인인구 비율 및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율



자료: 건강보험공단(2008)

### 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의 기본방향

-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하여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마련

<그림 8>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방향



- 정부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국민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2010.10.26)
-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총 4대 분야 23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5년 동안 75.8조원의 예산 투입
- \*저출산 39.7조원(1차 19.7조원), 고령화 28.3조원(1차 15.8조원), 성장동력 7.8조원(1차 6.7조원)

<그림 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개요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 주요 내용

1) 저출산분야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의 3대 분야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 강화
  -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 및 양육수당 확대(연령, 금액)
  -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천→3천5백만원)
- 추가적으로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 및 고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완화 및 운영지원 확대, 지역사회 유희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의 과제 보완

**< 2011년 서민희망예산(안) >**

- 보육·교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 만0~4세아: 소득 하위 50% 이하('10) → 70% 이하('11)
  - 현재 만5세아는 소득 하위 70% 이하에 대해 보육에 대해 보육·교육료 전액지원 중
  -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지원
- 상위 30% 소득가구는 맞벌이 가구 위주로 보육·교육료 지원강화
  -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기준 완화: 낮은 소득 25% 차감('10) → 부부합산소득 25% 차감('11)
  - 맞벌이 가구 보육비 전액지원대상: 월소득 600만원 가정까지 대폭 확대
- 저소득층의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양육비 지원 확대
  - 지원대상 확대: 만0~1세('10) → 만0~2세('11)
    - ※ 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 2세 월 10만원
  - 소득기준: 차상위계층 이하(최저 생계비 120% 이하) (월 160만원)
  - 지원금액: 월10만원('10) → 월20만원('11)

2) 고령화분야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3대 분야

-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 마련
-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
-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의 사전 대응을 위한 주택·교육·금융·재정 분야별 제도개선 추진
-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여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하였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

##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 궁극적 목표는 출산을 제고,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고령자의 생활보장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 1) 저출산분야
  - 맞벌이 부부 중심의 육아휴직제 개선,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산으로 보다 적극적인 일·가정양립 환경 및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활성화 기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쟁점 해소가 미흡하다는 지적
  - 초·중·고 자녀에 대한 실질적 대안 부족 지적
- 2) 고령화분야
  -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노동기회 제공,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노후생활설계 기대
  - 현 노년세대의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질적 향상을 통한 내실화, 기초노령연금의 안정적 지급 및 국민연금 재구조화를 통한 노인소득보장 안정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기대
  - 은퇴 후 소득보장 전략에 있어 노동시장 전입·출을 반복하며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한 노년 빈곤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

는 한계 존재

- 요보호노인보다 전체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정책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
- 정년연장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지적

#### 4. 저출산 대응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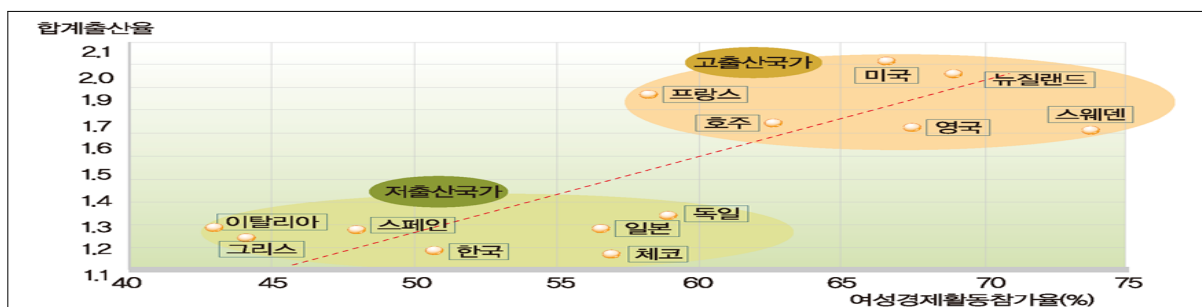
##### ○ 자녀양육부담 경감

- 미취학자녀 양육부담 최소화
  -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균형 배치
- 초·중·고 교육비 부담 경감
  - “초등돌봄교실” 확대: 정규수업+방과후 활동+가정 돌봄기능 제공
  - 학교자율화 확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전면시행 등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방안 지속 추진

#####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경영

- OECD 국가들의 경우 여성취업율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높게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출산에 따른 여성의 근로소득 상실, 경력단절 등 기회비용 (shadow cost)이 높아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동시에 낮음.

<그림 10>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합계출산율 국제비교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문화” 강화 및 보육참여 활성화
  - 직장보육시설 설치 지원 상한액 확대 및 대기업-중소기업 공동설치시 우선 지원기업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 강화
- 출산·육아에 따른 불이익 해소

#### ○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전략적 홍보

- 핵심 국정홍보과제로 선정하여 전방위적 홍보 추진
- 출산장려 홍보, 다자녀 장학금, 출산장려금, 어린이집 신축 등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 확대 유도

### 5. 고령화 대응전략

#### ○ 정책방향

- 단기적으로는 정년 연장 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지연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수요 유발을 통한 중고령자의 실업대책 마련
- 은퇴 고령자에 대해서는 ‘일자리나누기’와 같은 임시방편적 접근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고용자의 노동력 수요를 촉진시키는 시장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실행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

#### ○ 정년연장 검토

- 60세 정년의무화 및 정년연장 검토가 필요하며, 65세까지 정년연장 또는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 후 정년퇴직과 동일직장에서의 계속 고용제도 도입 고려
  - \*「고용전략 2020」에서는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한 ‘생애이모작’ 지원 강화, 2011년부터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대신 정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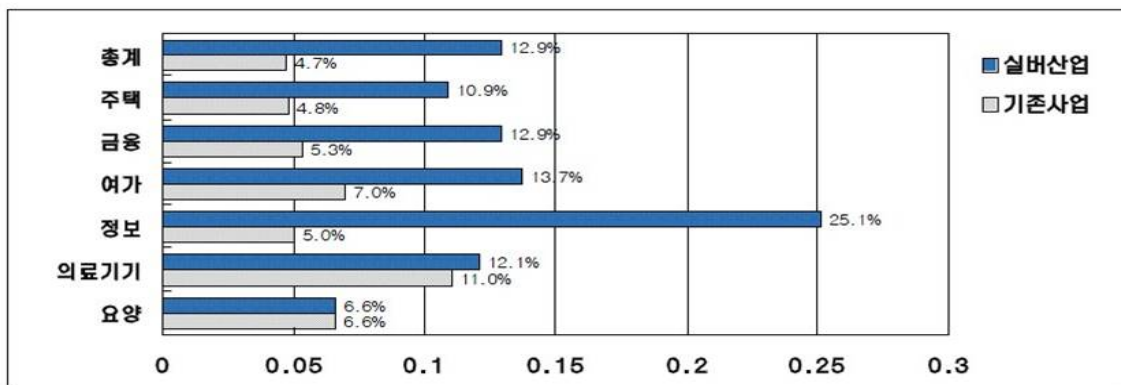
보장형 임금피크제 지원 폐지

-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월 30만원, 6개월) 현실화

### ○ 일자리 창출

- 공공 및 민간차원의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 및 고령자 친화형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모색
  -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 및 일자리 질을 반영한 기준설정에 노력
- \*2011년 예산안에서 노인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총 1,642억원 투입 예정

<그림 11> 실버산업 연평균 성장률 전망(2010~2020)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2006.

### ○ 전문인력 취업

- 베이비 붐 세대 은퇴는 다년간 축적된 수련기술과 노하우가 폐기되는 등 국가적으로 유용한 생산자원의 소멸을 의미
- 고령자 취업알선 기관의 일자리는 단순노무직 중심으로서, 은퇴하는 고령자의 경쟁력을 중소기업으로 전이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취업알선 필요

### ○ 지원인프라 개선

- 노동·고용 등 고령자 정책기구의 일원화, 직업훈련의 질 강화 등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개선
- 미국(노인청), 일본(후생노동성)은 고령자 정책 전담기구가 운영되나, 한국은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2원화 및 서울 시도 별개 조직 운영
- 고령자 직업능력 개발이 단기적이고 여성에 집중되어 있어 남성과 전문성 있는 중고령자의 재취업이 어려움.

###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통합 또는 재구조화

- 빈곤노인층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지는 '선별적 공공부조안'과 1인 1연금을 국가가 담보하여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보편적 기초연금안'이 제시
- \*공적소득보장율의 확대: 35.2%(2007) → 85.9%(2009년)

###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

- 일반소득계층에게 욕구수준에 따른 예방서비스 제공하여 비용억제를 강화
- 급여대상범위를 고위험계층까지 확대하여 계층간 갈등해소 및 보험재정 안정화 도모
- 재가장기요양자 수발가족에게 현금급여 인정을 통한 편법운영 근절

###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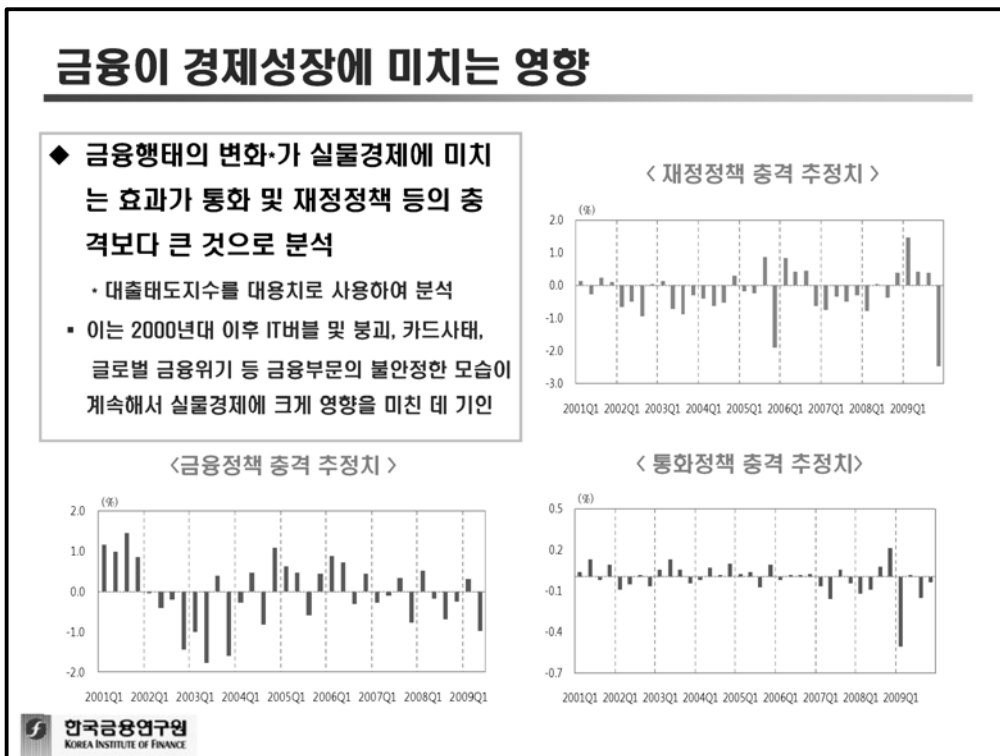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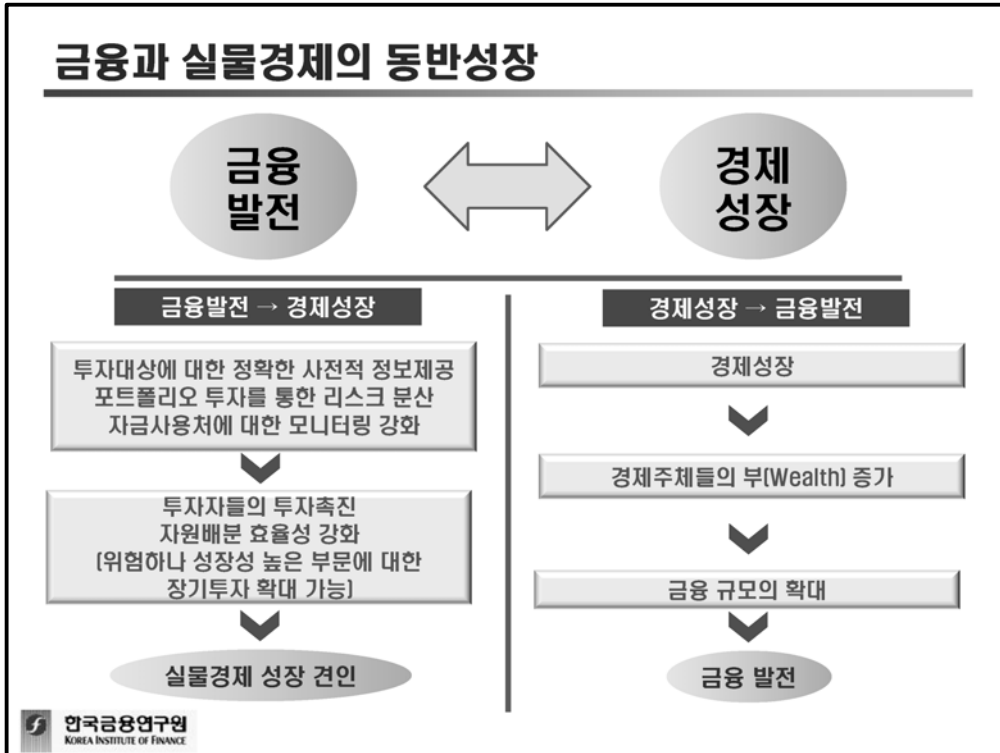
- 2011년도에도 보험급여비 증가세는 지속될 것인 반면, 수입은 뚜렷한 증가세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운영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재정적자 최소화를 위해 5,100억원의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수입확충과 재정누수방지 등 노력 경주 방침
-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액('10.1~9.): 4,847억원



- 노령인구 급증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므로 재정안정화를 위하여 가입자의 불필요한 이용 억제 및 공급자 재정위험 책임공유 등의 대책 마련
  - \*건강보험 급여비: 30.4조(2010) → 80.40조(2020) (약 2.68배 증가 예상)
- 건강보험재정 확충방안
  -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급여비의 50%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1년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특별법 종료 전 법적인 제도화 실현(의료급여는 별도)
  -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조건과 동일하게 형제·자매 전체 제외 및 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방안 모색
  - 부담 능력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 보험료 부과: 연금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금융소득(이자, 배당), 임대소득
- 소비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상급병원에 대한 외래이용 억제
  - 소비자 측면에서는 외래약제비 본인부담율을 처방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화
  - 공급자 측면에서는 요양기관 종별 진찰료 상대가치 차이 해소
-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대형종합전문병원 등은 중증질환 입원중심 기능으로 재편
-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 및 효율적 배분방안 마련, 효과성이 입증된 고가 의료장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급여화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단기적으로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대상 부과체계 단순화 등 현행 보험료부과체계를 개선
  - 중장기적으로는 형평성과 사회연대성 제고를 위하여 기본보험료와 소득 기준 단일 보험료부과체계 도입
- 진료비 지급체계의 개편과 관련하여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의 도입 타당성을 신중 검토

■ 금융과 산업의 동반 성장과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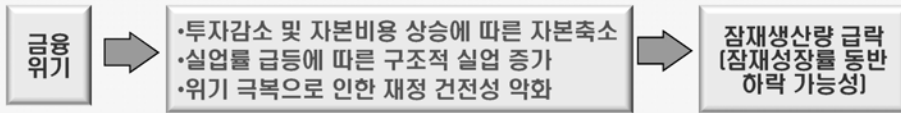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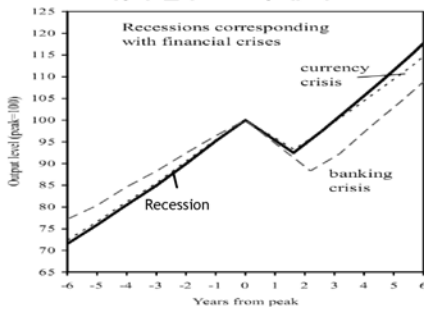
## 금융위기와 경제성장

◆ 금융위기는 GDP 규모를 크게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위기이전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데도 상당기간이 소요

- 다만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변화 정도가 다양하므로 위기극복 과정이 매우 중요



< 위기 전후 GDP 추세 비교 >



자료 : Corra and Savena(2007)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 과거 위기 전후 잠재성장률 변화 비교 >

지역	국가	잠재성장률 <sup>1)</sup> 비교	
		위기 전	위기 후
중남미	아르헨티나(2001년)	2.13('96~'00)	6.46('04~'08)
	브라질(1999년)	2.30('93~'97)	3.18('01~'05)
	멕시코(1997년)	2.42('89~'93)	3.25('96~'00)
아시아	인도네시아(1999년)	5.05('92~'96)	3.40('99~'03)
	한국(1999년)	7.03('92~'96)	4.87('99~'03)
	말레이시아(1999년)	7.57('92~'96)	5.18('99~'03)
기타	태국(1999년)	6.46('92~'96)	3.55('99~'03)
	미국 <sup>2)</sup> (1929년)	1.79('24~'28)	3.27('34~'38)
	스웨덴(1991년)	1.85('86~'90)	2.33('94~'98)

주 : 1) 잠재성장률은 HP필터링 이용 추정  
자료 : IMF, 1990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s 자료이용.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발전 방향

### 지속적인 경제성장

#### I.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 글로벌 차원 규제개혁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 국내 거시건전성 강화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 가계 건전성 제고

#### II. 금융의 실물경제성장 지원 효율성 강화

-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 III. 금융의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

- 금융중심지로의 역량 강화
- 국내금융산업의 글로벌화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발전 방향

## I.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 글로벌 차원 규제개혁동참
- 거시건전성 강화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 가계 건전성 제고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발전 방향

## 글로벌 차원 규제개혁 동참

I.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자본의 質 및 量 강화 :**

- ▶ 보통주 자본비율 규제: 3.5%(13년)→4.0%(14년)  
→4.5%(15년)
- ▶ Tier 1 자본비율규제: 4.5%(13년)→5.5%(14년)  
→6.0%(15년)
- ▶ 총자본비율규제: 8.0%(13년)

**경기순응성 완화 :**

- ▶ 신용호황기에 최소규제자본 이상의 추가완충자본(2.5%)  
적립
- 과도한 신용팽창 억제, 위기발생시 등 자본을 손실보전,  
대출재원 등으로 사용

### 은행 자본규제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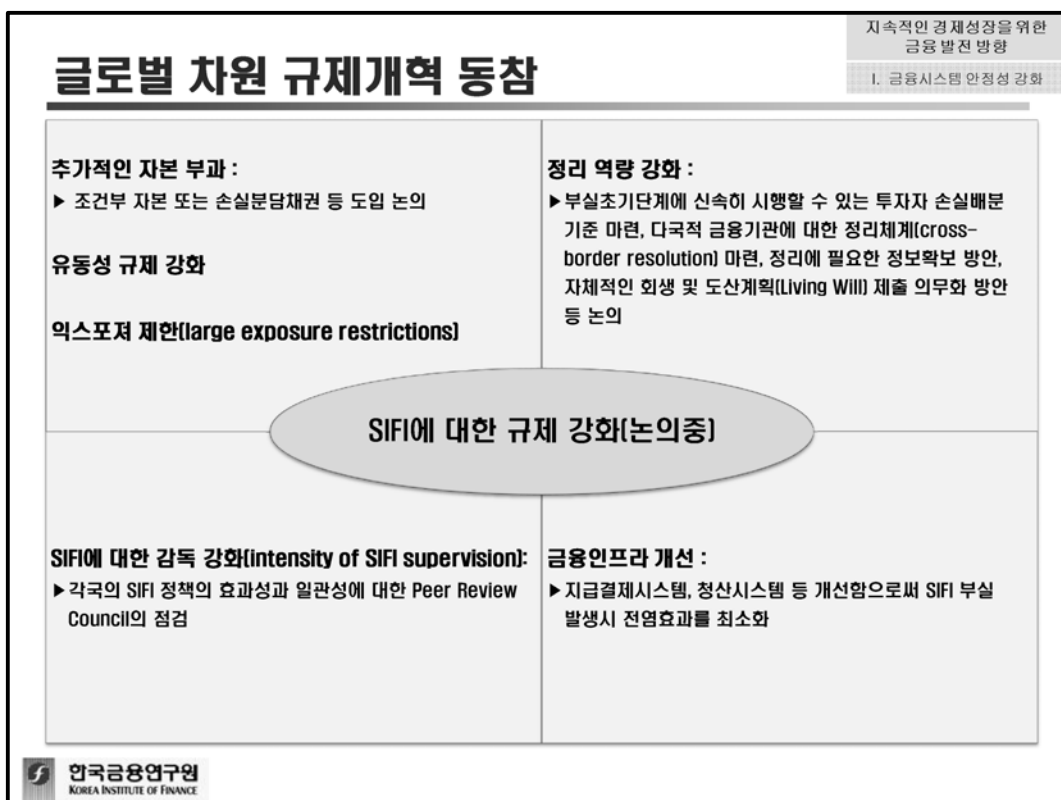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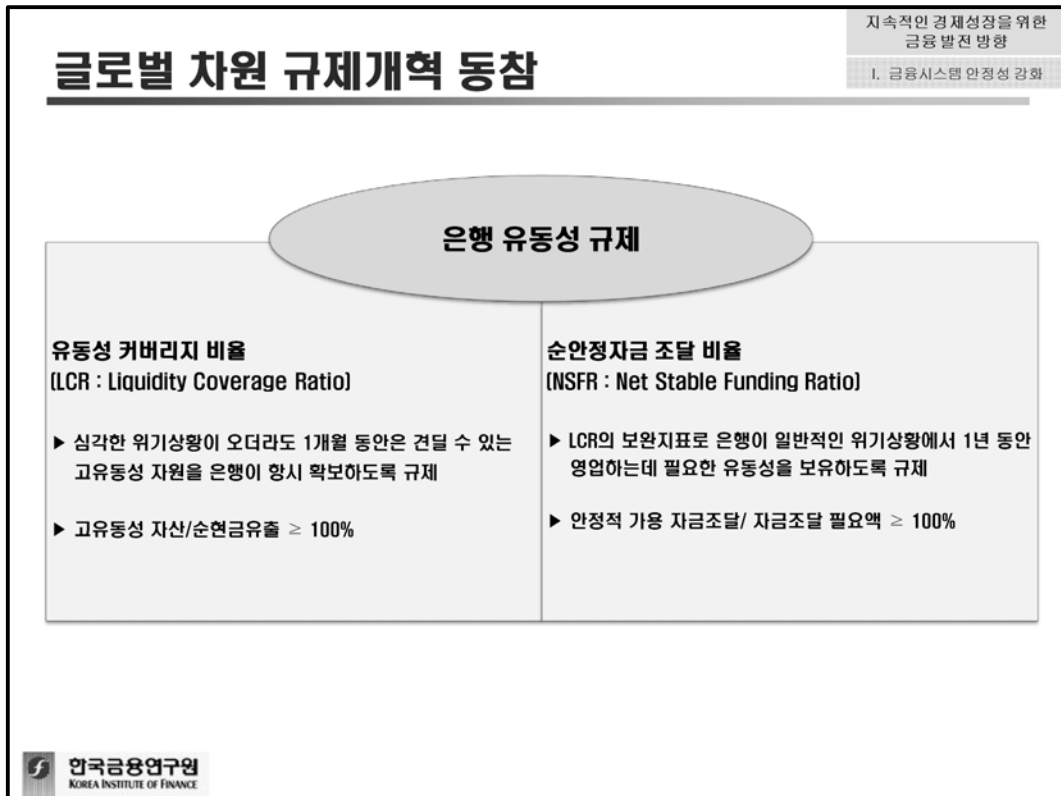
**레버리지 비율규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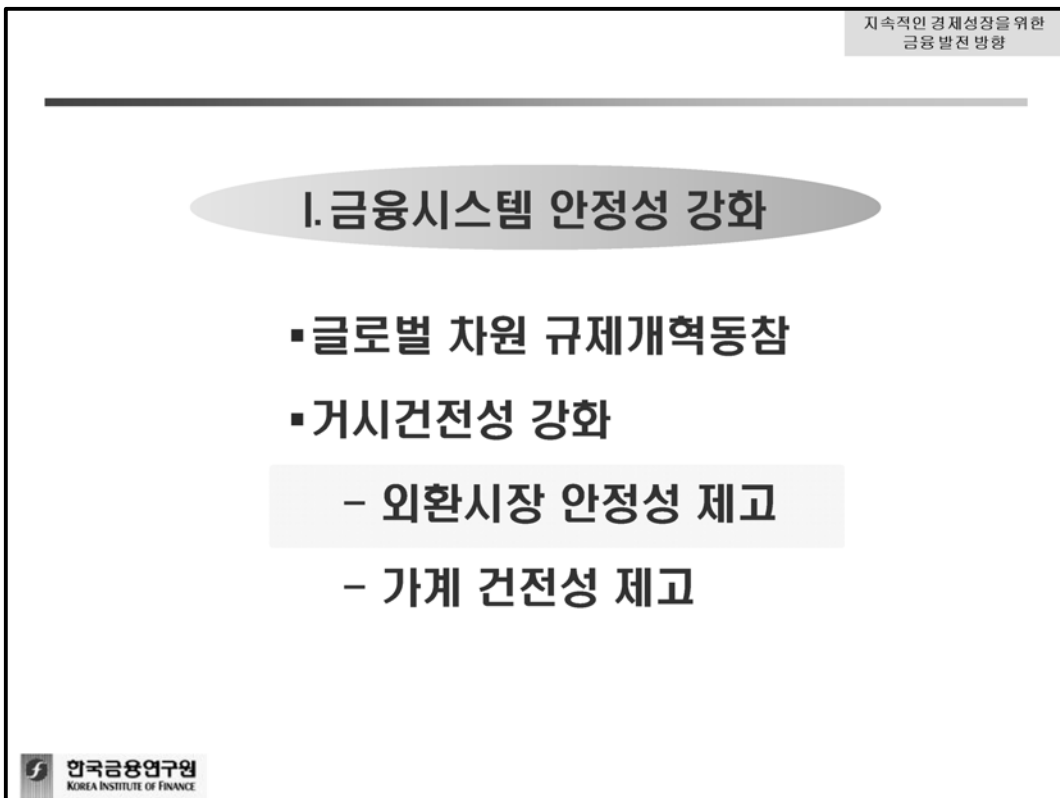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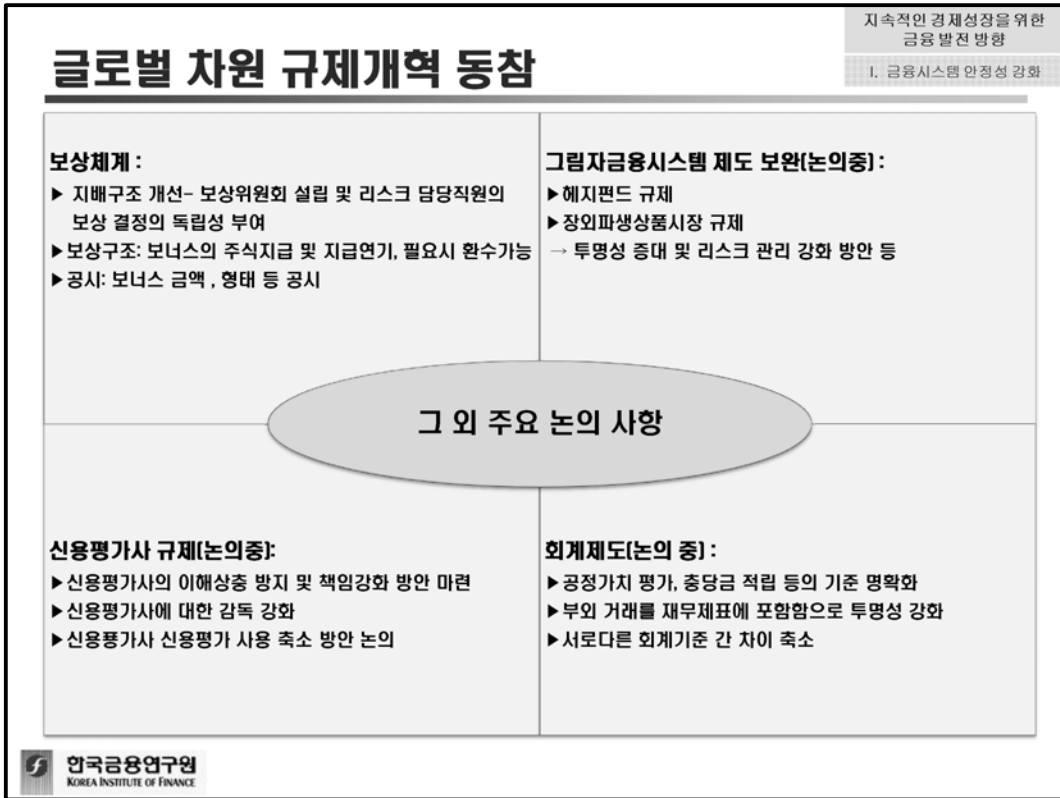
- ▶ 레버리지(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총익스포저) 비율규제: 3%
- ▶ 자본은 원칙적으로 Tier1 자본을 사용
- ▶ 자산에는 부외거래를 포함한 대차대조표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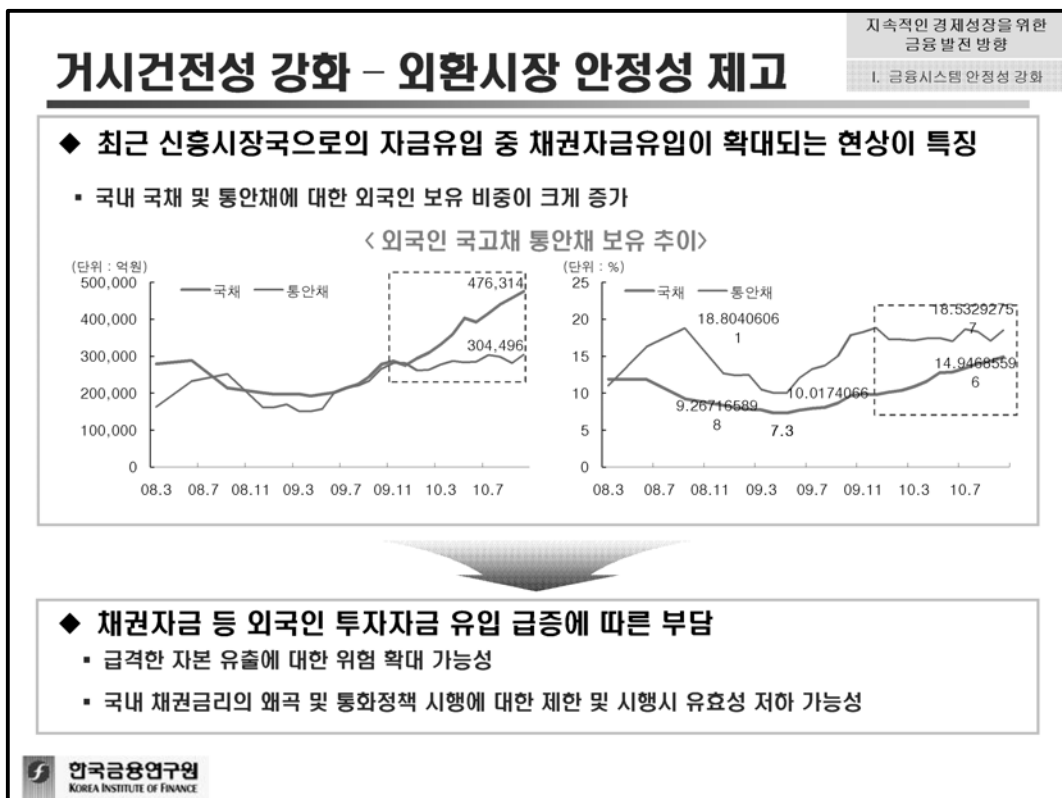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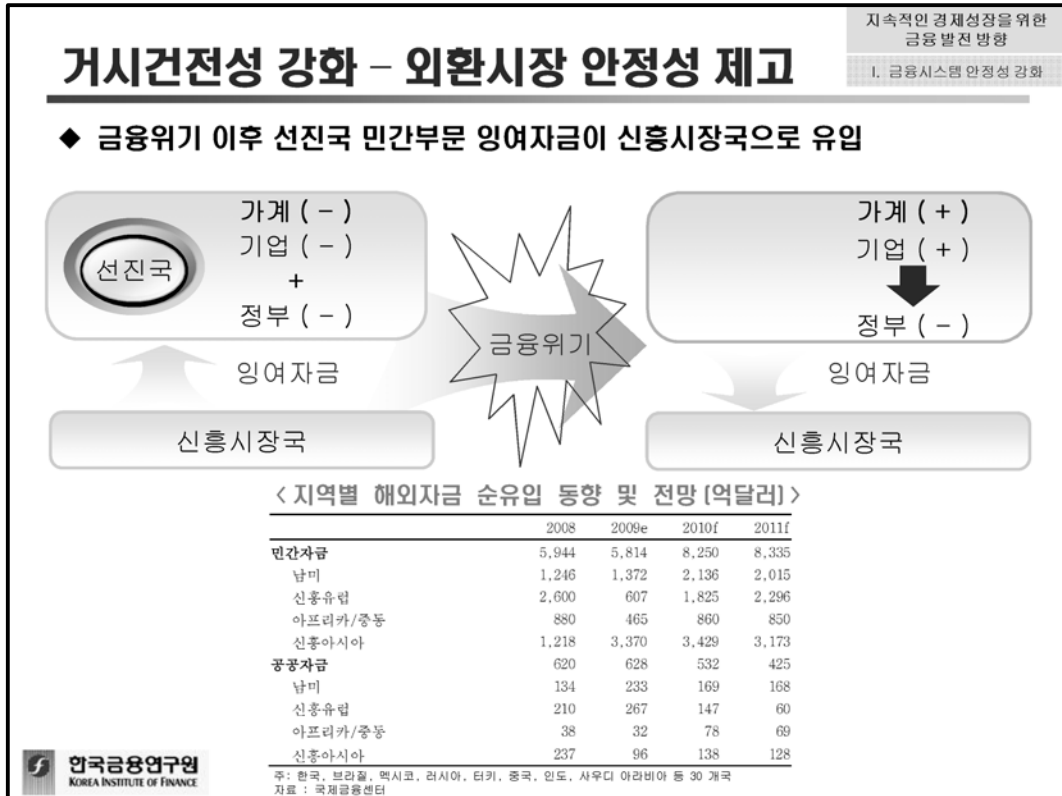
**리스크 커버리지 범위 확대:**

- ▶ 거래상대방 위험 등에 대한 요구자본 증액
- ▶ 위험관리 기준 강화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발전방향  
 I.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 거시건전성 강화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 ◆ 우리나라에 적절한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 급격한 외국인 자금 유입에 대한 대비 (예: 거래세 도입, 관련 과세제도정비, 외채관련 은행세 부과 등)
    - 최근 도입 및 시행국가: 브라질, 태국 등
  - 급격한 자본 유출에 대한 대비 (예: 외환보유고 확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 국내 채권금리의 왜곡 및 통화정책 시행에 대한 제한 및 시행시 유효성 저하에 대한 대비
    - (예: 금리정책 외의 유동성조절수단 강구, 국채수급조절을 위한 미시적 정책 마련 등)

- ◆ 최근 브라질 사례
  - 2009.10: 외국인의 레알화 채권 및 주식에 대해 2%의 거래세 부과
  - 2009.11: ADR(American Depository Receipt) 발행에 대하여 1.5% 세금 부과
  - 2010.10: 두차례에 걸쳐 채권투자에 대한 거래세 인상(2→4→6%)  
 해외투자자의 선물예치 증거금에 대한 세율도 인상(0.38→6%)


- ◆ 최근 태국 사례
  - 2010.10: 외국인의 태국 국채 등에 투자시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해 15% 세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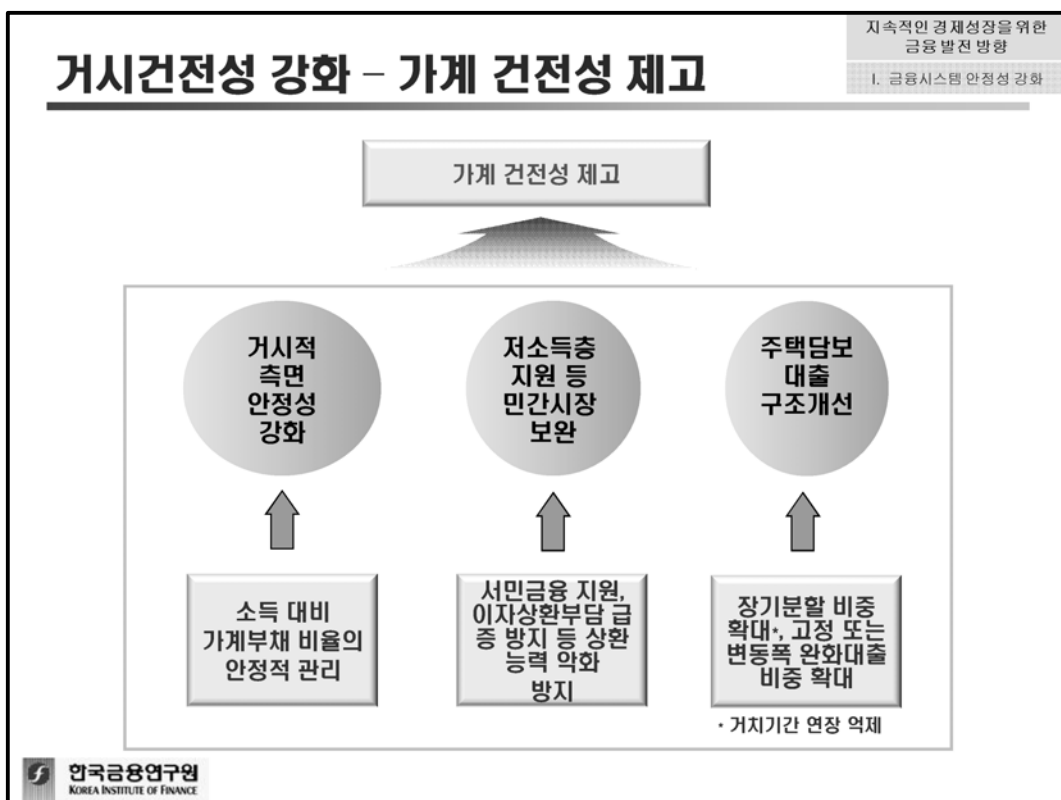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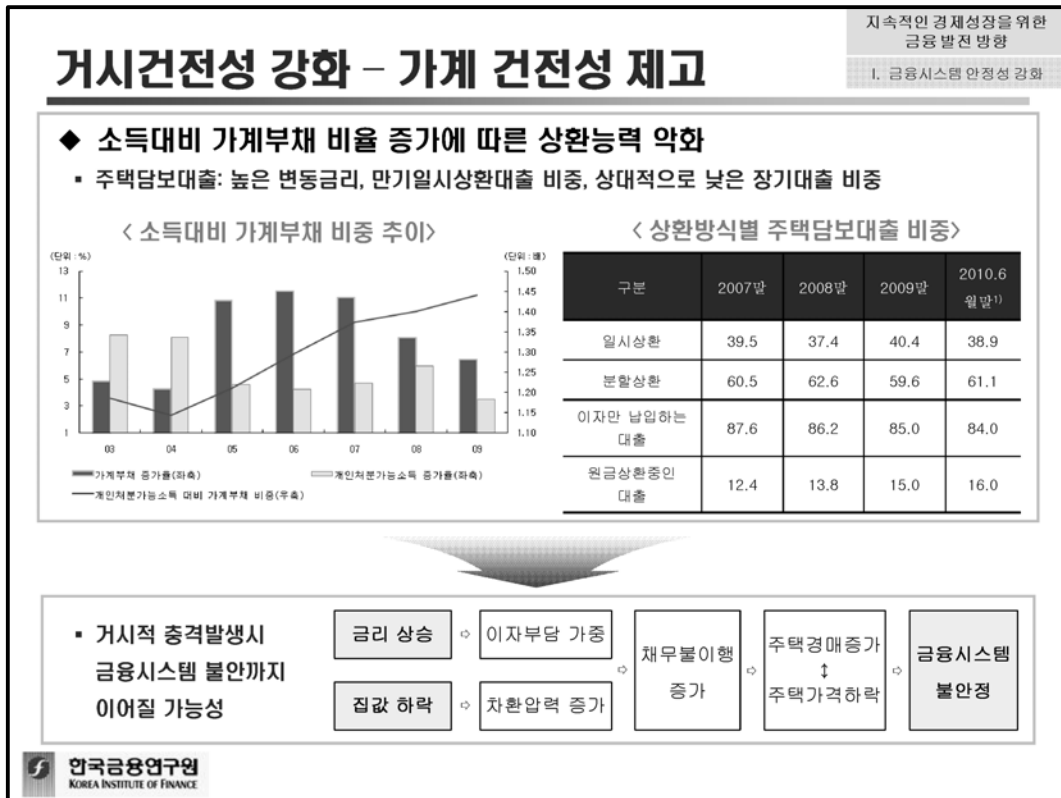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발전방향

## I.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

- 글로벌 차원 규제개혁동참
- 거시건전성 강화
  -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
  - 가계 건전성 제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발전 방향

## II. 금융의 실물경제성장 지원 효율성 강화

▪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발전 방향

##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II. 금융의 실물경제성장  
지원 효율성 강화

◆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 제조업 → 혁신형 지식산업

- 이에 따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경로도 다양화할 필요

현재 유형자본을 담보로  
대출을 공급하는  
부채형 금융에 주로 의존

↓

무형자본을 토대로 투자를  
하는 주식형 금융을 확대

↓

주식형 금융과 부채형 금융의  
적절한 혼합 및 보완으로  
금융중개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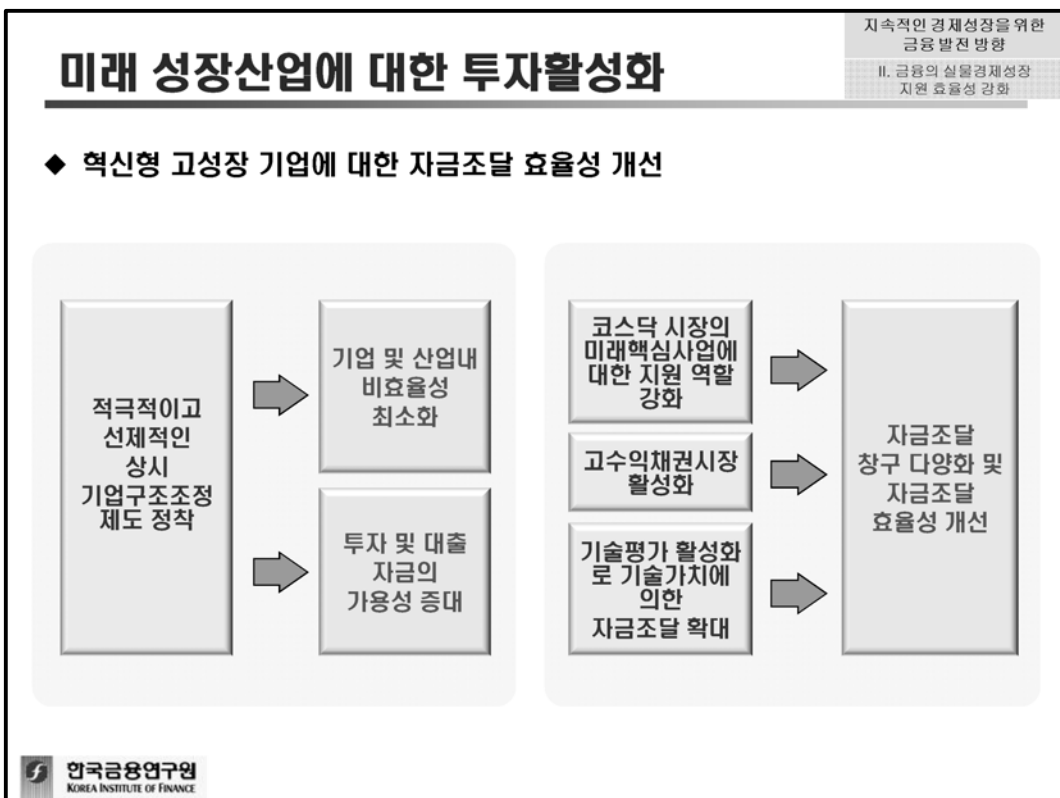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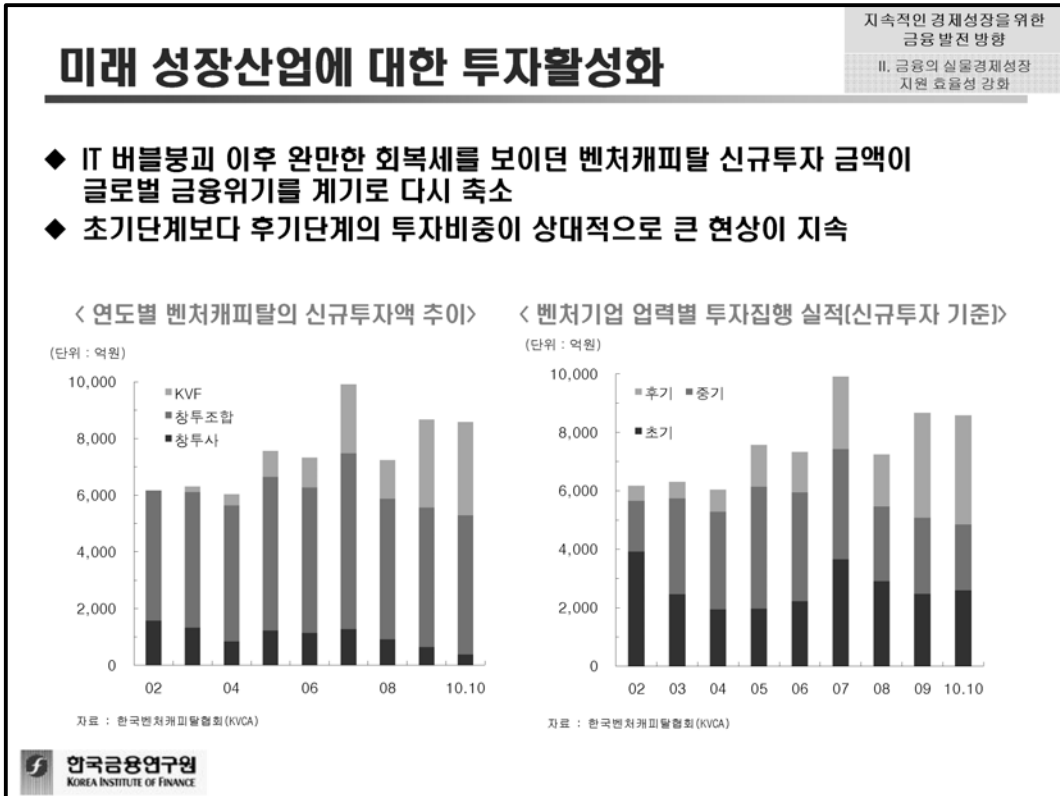
〈은행의 산업대출과 벤처캐피탈의 자금공급 추이〉

(단위 : 조원)

연도	산업대출 잔액 (좌축)	벤처캐피탈 투자잔액 (우축)
02	250	3.0
03	280	2.8
04	290	2.7
05	300	2.6
06	350	2.5
07	420	2.7
08	520	2.9
09	540	3.0
10.9	550	3.1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발전 방향

## Ⅲ. 금융의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

- 금융중심지로의 역량 강화
- 국내금융산업의 글로벌화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발전 방향

Ⅲ. 금융의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

## 금융중심지로의 역량 강화

◆ 실물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한 금융중심지 육성

- 2009년 1월 금융중심지로 서울 여의도(종합금융중심지)와 부산 문현(특화금융중심지)을 지정
-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전략적 방안

**자산운용  
중심 육성**

- 자산운용 중심이  
위기 이후  
서구중심에서 아시아  
신흥지역으로 이동

**back office  
중심 육성**

- 발달한 IT 산업과  
능숙한 금융인력을  
이용

**실물관련 틈새시장  
중심 육성**

- 우리나라에 발달한  
조선업 등을 연계한  
선박금융, 수출입  
관련 무역금융(trade  
finance) 등 관련 틈새  
시장 이용

한국금융연구원  
KOREA INSTITUTE OF FINANC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발전 방향

### Ⅲ. 금융의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

- 금융중심지로의 역량 강화
- 국내금융산업의 글로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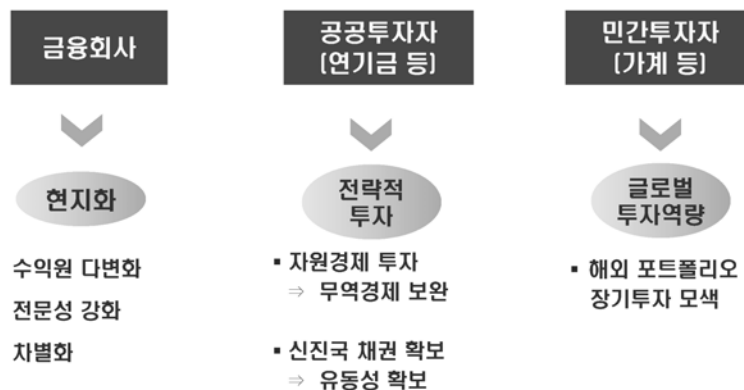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금융 발전 방향

Ⅲ. 금융의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

### 국내금융산업의 글로벌화

#### ◆ 국내 금융의 해외진출 모색

- 금융의 글로벌화는 글로벌 경영에 의한 현지화와 포트폴리오 투자, 국부관리 측면에서 중장기 역량을 강화



## ■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과제 : 노동분야

### 최영기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1. 일자리 不足經濟

- '97년 이후 반복되는 고용쇼크와 만성적인 고용부진으로 상시적인 일자리 부족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가 진행됨.
  - '98년 128만 명의 고용감소라는 사상 최악의 고용쇼크를 거친 후에도 2003년 신용카드대란과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 등으로 각 정권 초기에 고용위기를 경험.
  - 지난 10년 간 고용사정의 악화는 일자리부족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의 증가, 아웃소싱과 간접고용의 확산 그리고 영세 자영업의 팽창 등으로 고용의 질적 악화가 동시에 진행
- 단군 이래 제일 유능하다는 청년층은 노동시장에서 "88만원 세대"로 조롱받고,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왔던 베이비붐 세대들은 은퇴를 앞두고 일자리 없는 노후를 불안해 함
  - 세계시장에 접속된 업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더욱 고급화돼 가면서 정규직 노동시장은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 노동조합에 의해 2중·3중의 보호로 경직돼 있는 반면 비정규직·영세상공인은 무한 저임경쟁에 노출됨.
- 고용위기는 경기순환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며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적인 위기임.
  - 고용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전반의 활력과 도전의식이 쇠퇴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촉진되어 우리 사회를 늙고 불안한 사회로 만들어감.
  - \*Old Japan, Old Europe의 길?

□ 이번 경기회복으로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 이번 경기회복으로 일자리 부족경제에서 탈피할 수 없으며 고질적인 고용부진을 해소할 수도 없을 것임.

- 올해 3/4분기 369천명의 취업자 증가, 연간 33만개 일자리 창출이 전망되지만 2009년 7만개 일자리 감소의 기저효과를 감안해야 함.

\*2011년 전망: 4.5% 성장에 25만개의 일자리 창출

○ 하반기 고용개선 기조가 뚜렷하긴 하지만 자영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 취업자 감소와 청년고용의 위축으로 제한적인 고용개선 수준임.

- 자영업 취업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고용구조의 개선에 기여하지만, 이들은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실직은 노동시장에서의 퇴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자영업의 위축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2모작 인생설계를 어렵게 하여, 결국 자영업 부문의 과속 구조조정은 복지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

○ 청년 취업자도 계속 주는 반면 미취업청년이나 취업준비 청년층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는 좋은 일자리(decent jobs) 부족 때문임.

- 소위 “좋은 일자리”의 청년고용비중은 60%('96년)에서 36%('08년)로 하락

- IT venture 붐이 붕괴된 2000년대 초 이후 청년고용률은 계속 하락하여 '02년 45.1%에서 최근에는 39.5%(2010. 10)까지 하락

<표 1> 청년층(15~29세) 비중

(단위: %)

	'96	'98	2000	'02	'04	'06	'08
공공행정	23.7	20.1	13.8	11.8	11.9	14.3	12.1
300인 이상 기업	36.7	30.0	27.8	25.0	25.7	23.9	2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풍요 속의 빈곤, 중소기업 인력난**

○ **중소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과 지속적인 외국인력 수입수요를 들어 청년층의 눈높이를 문제 삼지만 일자리의 질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

- 대부분의 빈 일자리들이 150만원 미만의 월급에 고졸 이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로서 대졸자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님.
- 이는 정보의 mismatch문제가 아니라 임금·숙련의 mismatch이자 사업체의 입지에 따른 교통·편의시설 접근성·평판(명함의 주소)·기업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2. 국가고용전략은 필요한가?**

○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 없는 경기회복에 대응하기 위하여 '90년대 이후 OECD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정책을 구사함.**

- 고실업은 유럽의 고질병(Euroclerosis)으로 지목되어 복지·노동개혁이 꾸준히 지속되었고 '90년대 중반 이후 EU공동의 고용전략을 추진  
\*EU 차원의 고용전략은 "Lisbon Strategy(2000)"로 집약

○ **미국과 영국은 금융과 IT와 같이 매우 유연하고 혁신지향적인 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과감한 노동시장 유연화 추진**

- 이는 금융산업에 약이 되었지만 제조업 기반의 붕괴와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를 촉진하여 결국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의 변동 폭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게 됨.  
\*미국의 경우 '91년과 2001년, 2009년의 고용위기를 거치며 고용없는 경기회복 심화(2010년 3분기에 이르기까지 실업률은 9.1%)

○ **한국의 고용위기 대처법은 하이브리드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꾸준히 추진하는 동시에, 일자리 사회협약이나 국가고용전략의 수립 등 유럽형**



의 고용전략을 병행 추진함.

- 이런 선택의 배경은 한국경제의 핵심 경쟁력이 아직 혁신형 IT산업이나 금융이 아니라 제조업이기 때문일 것임.

○ 중국의 부상 등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일자리 양극화는 가속화될 것이고 산업구조조정과 국민경제 차원의 일자리구조에 대한 재편(realignment)도 불가피할 것임.

- 이 과정을 시장의 조정에만 맡길 것인지 정부와 재계 그리고 노동계가 긴밀하게 공조하여 정책적 조율에 나설 것이냐의 선택이 고용전략 문제임.

#### □ 「2020 국가고용전략」의 평가

○ 지난 10월 정부는 “2020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으나 금년 초 고용전략 회의를 시작할 때의 문제의식과 긴장감은 많이 퇴색

-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3분기 고용실적이 개선되면서 위기의식이 많이 퇴색하여 과감한 중장기 개혁보다 단기 미시정책에 치중함.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기간 제한 예외 확대 등

- 우선 현대차 사태에서 보듯이 사내하청·파견근로의 문제는 이러한 고용유연화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이러한 접근으로는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며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내기도 어려울 것임.

○ 우선 지금의 고용위기는 이번 경기회복으로 극복될 수 없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위기로서 정부 정책만으로 풀 수 없다는 인식이 필요함.

- 또한 노동정책의 범주 안에서만 해법을 찾아 노사관계만 탓한다든가 고용규제만 풀면 고용문제가 풀릴 것같이 주장하는 것도 잘못임.

○ **명실상부한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이 되려면**

첫째는 고용문제를 경제사회정책의 중심에 놓고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기 구상이 제시돼야 하고, 성장과 고용 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 고용과 복지의 융합전략이 필요함.

둘째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임금-고복지-장시간 노동의 노사 담합구조를 깨고 일자리 분배구조의 극심한 불평등을 시정하는 범사회적인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셋째 이를 위해 노사가 주도하는 「2020 일자리 협약」을 추진

**3. 성장만능에서 성장·고용 복합전략으로**

○ **외환위기 이후의 고환율 기조가 내수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환율정책·조세정책 등의 선택에서 고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관행을 정립
-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물적 투자 위주의 조세인센티브를 인적자본 위주로 전환하는 새로운 발상이나, 유연근무제 등 고용관련 조세인센티브를 더 개발해야 함.

○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고용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함.**

-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은 외환위기 이후 더욱 커지고 있지만 이러한 중소기업 일자리의 증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 증가와 경쟁력 향상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임.
-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 일자리의 팽창이 동시에 진행되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 인력의 유입에 의한 것일 수 있음.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2배 가까이 벌어졌고 생산성 격차는 3배 이상 차이

○ 중소기업·자영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이 부문 일 자리의 고급화의 궁극적 해법이며 그렇게 해야 이 부문의 만성적인 인 력부족도 완화될 것임.

- 부품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중견기업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기술 개발에만 치중할 뿐 작업현장에서 길러지는 숙련기술 인력의 수급문제에는 소홀
- 또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보다 산업단지 또는 중소기업 집적단지의 기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더 고용친화적임.  
\*지식경제부의 QWL 벨리 조성계획('10.10.27)
-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인력조달을 위한 교통·주택과 같은 인프라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함.  
\*과거 울산·창원 공단이나 중국 무석(무시) 공단의 사례

○ 도소매 음식 업종의 영세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SSM 상권 규제문제도 고용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함.

□ 단순 고용정책이 아니라 종합청년대책을

○ 2000년대 초 IT 버블 붕괴 이후 창업 열기가 가라앉으며 청년고용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정책 차원에서 녹색산업과 창의산업의 적극적인 창업붐 조성

- 녹색성장 모델로서 중소 녹색기업을 육성하고 문화·콘텐츠 산업·방송통신·S/W 등 중소기업형 감성·창의산업을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함.
- 창업의 열기는 청년층의 근로의욕을 북돋을 수 있고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의 길을 열어주는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됨.

- 한편 사회서비스 분야와 금융·사업서비스업에서 안정된 청년일자리를 크게 늘릴 수 있음.
- 기업의 청년채용비용을 낮춰주는 임금보조금제도로써 인턴이 널리 활용되었으나 공공근로형 인턴을 학습+취업 병행형으로 전환하여 향후 5년간 중소기업·공공부문 인턴제도를 지원
  - 공공부문의 권고형 청년채용 할당제를 선택적으로 활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권장기준은 3% 이상
- 청년고용문제는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과 질적 저하에도 연유하므로 대학 구조조정과 대학의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기능의 강화가 요구됨.

#### 4. 임금·근무제도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 국가고용전략 차원에서 다뤄야 할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임금·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고 다양하게 개편하여 일자리의 분배구조를 보다 평등하게 재분배(위크셰어링)하는 것임.
  - '97년 이후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직접고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정규직들과는 고임-고복지-장시간 근로의 타협을 추구했고, 노동계도 대기업 정규직(insiders) 중심의 담합에 탐닉해 왔음.
  - 비정규직과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해고의 버퍼로 활용하고 이들의 노동조합 가입(또는 결성)에도 소극적이었음.
- 사무 관리직과 연구기술직 등 화이트컬러의 만성적인 연장근로 관행은 한국기업의 비밀병기이지만 이 역시 매우 비인간적일뿐 아니라 여성 취업과 일-가정 양립(work-life balance)의 최대 장애요인임.

-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보다 8.4%p 낮지만 학력이 높아 질수록 이 격차는 급격히 증가하여 중졸 6%p, 대졸 20%p 정도 낮음.
- 기업의 고용 유연화 수요를 다양한 근무형태와 임금의 유연화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고용창출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임.
  - 이는 매우 한국적인 문제에 대한 한국적인 해법이기도 함.
  - 스마트워크·정규직 파트타임·점진적 은퇴제도 등 다양한 근무형태를 개발하여 여성·청년·고령자 등 취업애로계층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함.
- 관성적이고 만성적인 연장근로 관행을 줄이고, 중장기적인 워크셰어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남성 외벌이 모델에서 1.5인소득의 맞벌이모델로 근무형태와 생활 패턴을 전환
  - 화이트칼러에 만연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무보수 연장근로)관행이나 정책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가름하는 포괄역산의 임금지급 관행을 타파
  - 연장근로의 유인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할증률의 하향조정, 휴일 특근에 대한 대체휴가 제공의 의무화, 노사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저축제(working hours account)의 도입을 추진

\*장시간 근로자(법정 연장근로 초과) 비중: 한국 49.5%, 일본 17.7%, 미국 18.1%, 프랑스 14.7% (2005년 기준)
- 근무제도 유연화는 정부 정책만으로 관철되지 않을 것이며 노사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임.
  - 특히 노동계의 자발적인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요구와 이를 위한 임금과 근로시간의 교환에 대한 타협의지가 전제되어야 함.

□ 임금의 유연화

- 연공체제와 노사 협약에 의한 연례적인 임금상승 압박은 장기고용을 위협하는 근본원인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 관행도 개선되어야 함.
  - 이 같은 관점에서 2011년도 공무원 및 공공부문의 5% 급여인상 방침도 검토되어야 하고 이들의 연장근로수당 운영 방식도 개선되어야 함.
- 영국과 미국을 제외한 OECD 주요국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경제(또는 업종)차원의 임금조정을 거치면서 가격경쟁력과 생산성 동향 그리고 임금의 공정성(임금격차의 축소) 같은 점을 리뷰함.
- 임금교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임금체제로서 연공급 체계의 경직성을 근원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직무형 임금(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직무와 숙련의 가치에 맞춰주는) 체제를 확산해야 함.
  - 직무형 임금체제는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비를 줄일 수 있고 노동이동에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장기고용과 정년연장의 단초가 될 수 있음.
    - \*무기계약직이나 임금피크제의 예
  - 임금체제를 어느 한 사업장의 노력만으로 개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노동시장 인프라로서 주요 직업에 대한 직무평가와 숙련표준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어야 하므로 정부가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고 업종단체와 임금 전문 민간업체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함.
- 모든 근로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정되는 것이어서 개편을 위한 협의와 조정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0여년의 임금체제 개편 계획을 갖고 다각적으로 추진
- 과거 20년의 노동개혁이 노동법 개정을 위한 것이었다면 향후 20년은 임금체제 개편의 시대가 되어야 함.

- 고도성장기의 연공형 임금체계로는 저성장기·고임금 시대를 견딜 수 없으며, 이를 방치하면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과 아웃소싱, 조기명퇴, 채용기피 경향을 막을 수 없을 것임.

## 5. 고용과 복지가 융합된 사회 안전망 정책

### ○ 우선 고용보험의 방대한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요구됨.

- 실업급여의 낮은 보장성(최장 9개월, 1일 최고 4만원)도 문제지만 전체 취업자 2,500만명(피용자 1,600만)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1,000만명에 불과하고 실제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문제임.

### ○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고용 불안계층의 높은 유동성과 영세사업장의 높은 변동성 등에 가로막혀 고용보험 가입률은 더 이상 올라가기 어려움.

- 또한 높은 자영업 비중도 사각지대 비중을 높이는 요인이므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고용불안 계층을 위한 별도의 안전망 대책이 마련돼야 함.
- 정부가 일정 규모의 재정출연을 통하여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에게도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지원서비스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
- 또 하나의 방안은 임금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감액하는 방식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

### ○ 고용보험재정 고갈문제를 계기로 사회안전망 운영의 합리화 방안과 이용자의 도덕적 책무를 높이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함.

- 저출산대책 재원을 고용보험 기금에서 조달하는 문제나 자영업자의 사각지대 문제를 정부의 재정 부담없이 고용보험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도 원칙에 맞지 않음.

<표 2> 각 정권별 경제·고용실적

	GDP 실질성장률(%)	취업자증감 (천명)	실업률(%)	고용률(%)
'88년~'92년	8.7	531	2.5	58.4
'93년~'97년	7.4	441	2.4	60.3
'98년~2002년	5.0	191	4.9	58.1
2003년~2007년	4.3	253	3.3	59.7
2008년~2010년	2.2	134	3.4	59.3

주: 2010년은 3/4분기 자료, 취업자는 연평균 증감.

<표 3> 베이비붐 세대 현황

'35~'45년생 (65세 이상)	'46~'54년생	'55~'63년생	'64~'72년생
325.4만명	443.2만명	713.9만명	'743.4만명

\*향후 9년간 '55~'63년 세대 714만명의 은퇴가 예정되어 있음.

<표 4> 고용계약기간 만료자의 고용지위 변동

(단위 : 명, %)

근속년수	계약 만료자				
	계약종료	정규직 전환	계속고용	기타 (방침미정 등)	
1년 6개월 이상	10,960 (100.0)	3,638 (33.2)	2,771 (25.3)	4,261 (38.9)	290 (2.6)
1년6개월~2년 미만	4,670 (100.0)	2,072 (44.4)	1,037 (22.2)	1,272 (27.2)	290 (6.2)
2년 이상	6,290 (100.0)	1,566 (24.9)	1,734 (27.6)	2,989 (47.5)	0 -

자료: 노동부,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현황조사(2010.6월)」



<표 5> 예산지출 분포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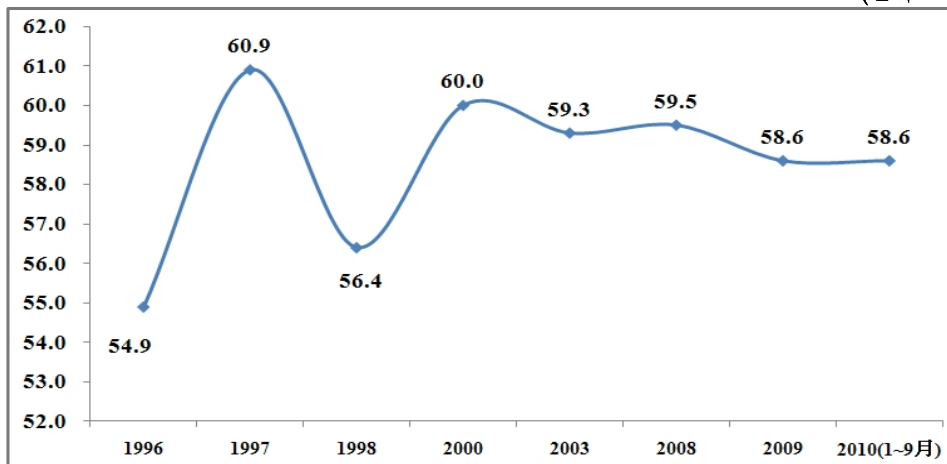
	국방	일반행정	경제	복지	교육
1988~'92	21.5	9.0	19.6	18.2	16.0
1993~'97	15.8	9.5	23.6	18.2	17.9
1998~'02	11.4	11.7	25.1	21.1	15.3
2003~'07	10.7	18.3	24.0	25.9	13.7
'08년 계획기간('08~'12)	10.3	21.1	21.8	30.5	14.2

자료: 박승준(2008.12), 『분야별 재정배분의 결정요인 분석과 국제비교』, 국회예산정책처.

주: 1) 일반회계 순계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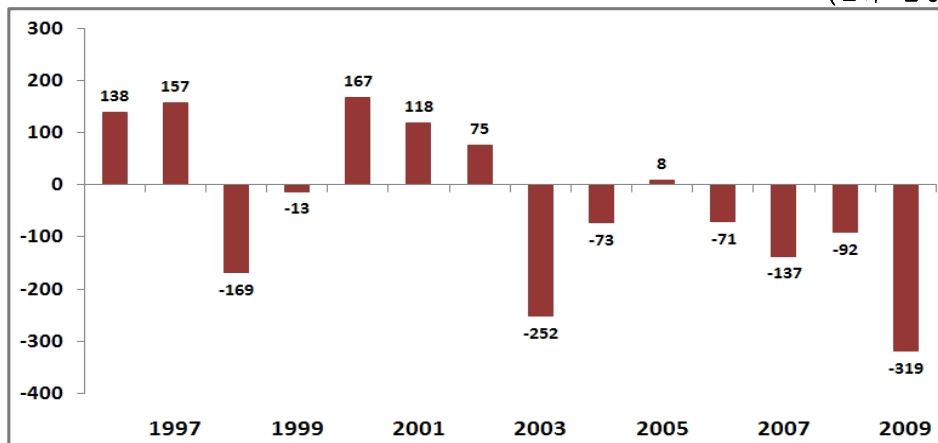
<그림 1> 고용률 추이

(단위: %)



<그림 2>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천명)



## ■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경쟁력 확충 방안

최영락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부 교수

### 1. 한국 과학기술의 현주소

#### 과학기술 규모, 국제비교

##### ○ 과학기술 자원

- 총연구개발비: 세계 7위, 279억 달러(2009)
- 총연구원수: 세계 7위, 24만 4천명(2009, 상근기준)

##### ○ 과학기술 성과

- 국제특허: 세계 4위(2007)
- 해외논문: 세계 11위(2009)

#### 현주소(종합): 양적 규모에서 세계 10대 국가에 진입

### 2. 한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수준

#### 해외 및 국내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4단계

- 1단계: 조립기술, 운전기술 확보(경쟁력 원천: 우수한 노동력)
- 2단계: 생산기술, 공정기술의 고도화(경쟁력 원천: 생산기술)

○ 3단계: 기술집약형 신제품 및 부품/소재(경쟁력 원천: 기술혁신)

○ 4단계: 원천기술/아이디어로 선도제품 창출(경쟁력 원천: 지식)

□ 주요국 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수준

○ 중국: 1단계 ⇨ 2단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중

○ 한국: 2단계 ⇨ 3단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중

○ 일본: 3단계 ⇨ 4단계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중

○ 미국: 4단계 역량 확보로,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

□ 주요 쟁점

○ 한국 기업들의 현 위치 파악이 중요

-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대단히 발전해 왔으나, 기술경쟁력에서 전체 4단계 중 2.5 단계에 도달한 것에 불과

○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단계를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

- 끝부분이 어디까지이고, 한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모습과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큼

○ 일본 기업들도 아직은 End-product 중심의 사고에 젖어 있음

- 생산기술력은 막강하나, Total Engineering Capacity가 부족

○ 미국: 4단계에서 신제품 창출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발휘

- Game Changer Technology 역량 확보

- Customer를 중시하나, 소비자들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 Google, Intel, Apple 등
- 지식기반 경제/사회를 견인하는 주도권 확보

### 3. 중점 추진전략

#### 기술경쟁력 전략간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한 병렬적 접근

- 전략 1: 2단계 ⇨ 3단계로 전환하려는 전략(예, 기업은 60%)
- 전략 2: 3단계 ⇨ 4단계로 전환하려는 전략(예, 기업은 30%)
- 전략 3: 궁극적인 4단계를 달성하려는 전략(예, 기업은 10%)

#### 기술경쟁력에서 새로운 시각 도입

-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중시했던 순위(ranking) 위주의 경쟁력 개념 탈피
- 프런티어를 개척하는, 상대적 강점의 “명품” 만들기로 전환
  - 루이비통과 샤넬, 아르메니와 구찌간 순위를 매길 수 있는가?
- Problem-solving 강점에서 Problem-defining 역량 강화로 전환

#### 높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접근법 확립

- 불확실성 시대에서도 목표지향적 접근법은 유력한 수단
- 프런티어 개척을 위한 선택과 집중, 그리고 Critical Mass 형성

○ Search 위주로부터 Creation 역량 강화로 전환

#### 4. 정부의 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제안

##### <전제사항>

21세기 글로벌 기술경쟁력 주도권을 확보하고, 앞에서 언급한 궁극적 목표인 4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단절된 새롭고 과감한 시스템, 제도, 정책의 개혁을 요구

가.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을 종속변수로 놓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수립하려는 자세 필요

○ 기업의 차세대 기술혁신 모형을 밝혀내려는 노력 빈약: 기업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영역이라는 시각은 방관적 자세이며, 기업을 제대로 알아야 좋은 정책이 나온다는 접근법이 타당

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책수단들의 발굴

○ 현 정책수단들을 점검해보면 예산을 수반하는 육성정책(promotion policy)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음

○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규제정책(regulation policy), 인프라정책, 종합조정정책(orchestration policy)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육성정책과 새롭게 필요한 정책수단간의 적정 포트폴리오 형성을 실시

○ 또한 새로운 국정과제로 등장한 복지, 환경, SOC 등을 기술혁신 견인형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들의 마련이 매우 빈약

다. 시스템 및 제도를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책들의 추진

- 정부연구개발사업, 기술혁신 지원정책수단 등은 1980년대 이후 순차적으로 추가되어 현재 누더기 상태에 있으며, 이들을 21세기에 맞도록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없음
- 정부의 역할 재정립: 현재 정부가 너무 많은 일을, 너무 쪼개서, 너무 강한 힘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라. 산업계 핵심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수립

- 현재 우수인력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적음
- 가장 큰 원인은 이공계를 전공할 경우 경제적 안정 및 삶의 가치와 보람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임
- 특히 산업 현장에 대한 우수인력의 기피로 인해, 우수 현장기술자의 대가 끊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어, 한국의 큰 강점이 제조업 경쟁력을 조기에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

마. 미래 기술경쟁력 비전과 기획의 강화

- 선진국들과의 기술경쟁력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가 명료하지 않음
- 많은 주체들이 일체감을 형성하면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기 위한 “공통의 비전과 발전 경로” 수립이 불분명